

제320회국회  
(정기회)

#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12 호

국회사무처

2013년11월21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1. 경제에 관한 질문

## 부의된 안건

1. 경제에 관한 질문 ..... 1

(10시10분 개의)

○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전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로 신지식인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안,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로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 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경제에 관한 질문

(10시12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다음에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 부산진갑 출신의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린 의원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

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부산진갑 출신 나성린 의원입니다.

2008년 미증유의 세계경제 위기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했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아직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의 고조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 역시 좋지 못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새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여·야·정이 경제민주화법안 통과에 많은 비중을 두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좀 더 무게 중심을 옮겨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경제와 관련해서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창조경제 등을 통해서 경제의 부흥을 이루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중산층을 복원하고 민생안정을 기하는 데 노력할 생각입니다.

○나성린 의원 제가 조금 더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에서 보듯이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산층 70% 복원입니다. 그것을 위한 두 가지 핵심정책이 있는데 하나는 경제민주화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경제를 통해서 경제성장잠재력을 확충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지요.

○나성린 의원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이 통과됐어요. 몇 개 통과되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상반기에 8건……

○나성린 의원 18개 통과됐어요.

혹시 그 안의 내용들 대강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하도급법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재벌개혁도 있고 하도급법 그다음에 비정규직 차별해소, 가맹점 거래 공정화, 전통시장 활성화 등 18개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아직까지 경제민주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의원 왜 그럴까요?

○국무총리 정홍원 경제민주화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과급이 됴므로 해서 중소기업에 일감나누어주기 등 이런 몇 가지 좋은 조치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체감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성린 의원 법안은 통과됐지만 아직 시행시기가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나성린 의원 또 감을관계에 있어서는 법으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정부가 조금 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동감합니다.

○나성린 의원 남아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들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한 10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저도 조금 전에 표에서 정리해드렸는데 아직까지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구요.

문제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입니다. 올 초에 야당 의원님들의 협조로 4·1 부동산대책과 추경이 통과됐어요. 이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야당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떤 경제활성화 법안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에 우리 국회에서 9 대 1 정도로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경제민주화를 한 3,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7 정도로 무게중심을 옮겨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동안 여야 합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률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경제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보완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시장경제의 기초질서가 바로 되고 균형 있는 경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경제활성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여야간에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충정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빨리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성린 의원 경제민주화는 계속 추진하되 경제활성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나성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국회에서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데, 부총리께서 생각할 때 반드시 빨리 통과되어야 될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희가 경제

관련해서 법안 계류된 것을 살펴보니깐 한 100여 건의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느 정도 불씨가 지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든지 또는 창조경제 관련 벤처대책 그리고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이것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제가 조금 전에 표에서 보여드렸는데, 표가 지금 없어졌는데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보여 드렸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상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상화 관련 법안이 시급한 게 뭐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부동산을 정상화하려면 수요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데 특히 세법 관련해서 다주택 양도세 완화 그런 법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급 측면에서 좀 더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런 분야가 있을 수 있겠고요. 나머지 기타 법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특히 세법에 관련된 사항은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취득세 인하도 포함되겠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런데 야당에서는 대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물론 야당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게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크게 봐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씀드려서 혜택 보는 계층에 있어서의 어떤 차등성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접근방법에 있어서 주택시장의 매매보다는 현재 기존에 있는 전월세라든지 이런 데 대한 혜택이 더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서 야당의 견해는 조금 다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제가 볼 때는 투기 극성기나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규제를 야당은 계속 고집하

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투기가 재현되지 않을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지금 당장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투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워낙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어서 그런 걱정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서 결국 경기를 회복하는 게 좀 더 우선돼야 되고, 또 그런 투기에 대한 것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런 장치를 이미 저희가 마련하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투기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세금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투기는 어떻습니까? 금리정책, DTI·LTV와 같은 금융정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융정책 그리고 필요하다면 투기지역 지정과 같은 직접규제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야당 의원님들도 생각을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지금 존경하는 나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저희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워낙, 부동산이 침체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이 지속되면 그야말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주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주택시장 활성화 내지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어떤 의미에서는 투기의 걱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춘 정책과 법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우선 활성화시키고 투기가 재현된다면 금방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법안·대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동산 정상화가 된다면 경제성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지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여러 가지 연구원들의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국토연구원에 의한 분석에 의하면 두 번에 걸친 대책, 4·1 대책하고 8·28 대책에 의해서 대개 GDP의 연간 한 0.15%p의 상승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런데 4·1 부동산 대책은 이미 그 효과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금년 말까지 그런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때 4·1 부동산 대책에 지분매입제도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그것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크게 두 가지로 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해서 집주인이 목돈을 마련하는 것은 아직 그게 크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아니, 그 목돈 마련은 전세대책이고, 지분매각형, 지분매입……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 지분매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부동산 시장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기대하에 그런 것도 활성화되는 것이니까 그런 주택가격 활성화가 전제가 돼야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매매활성화 효과가 조금 있다가 지금 다 죽어 가는데 저는 지분매입제도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돈 안 드는 전세대책도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좀 더 정부의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8·28 전월세 안정대책은 아직까지 실시가 안됐지 않습니까, 국회에 아직 상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안 통과와 관계없이 모기지제도, 수익공유형 모기지제도 이것은 지금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좀 효과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이미 모기지제도에 대해서는 신청이 상당히 있고, 또 저희로서는 그런 현재의 신청 정도를 감안해서 현재 주택기금의 여유분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확대가 가능한 부분은 필요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야당은 지금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는 전월세 가격급등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어떤 의미에

서는 그냥 당장에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가격규제를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책을 할 때는 늘 그 정책의 부작용과 향후에 발전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과거의 경험도 그렇고 다른 나라 예를 보더라도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고 또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규제하기보다는 가격을 보조하는, 지금 말씀드린 주택의 바우처라든지 이런 제도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노태우정부 때 예를 보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한 3, 4년 지나면 안정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도 도입 시기 한 1, 2년간 가격이 폭등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주장하시는데 만약에 그 가격폭등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국민이 동의한다면 저는 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정치적 위험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는 정치적 위험보다도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풀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격상한제는 상당한 위험성이 더 크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험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우리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적 위험성을 더 중요시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정치적 위험성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정치적 위험성에 대해서 경제적인 위험성, 다시 말해서 부동산시장의 교란 요인이 상당히 격정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전월세 상한제의 제한적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한적 도입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지역을 정해서 제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폭등지역을 국한해서, 폭등의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했을 때는 오히려 세입자 간에 상충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에 해당하

는 사람은 어떤 혜택을 보고 또 다른 지역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만약에 어떤 급등하는 지역을 정한다면 급등할 때 그 급등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표현이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뒷북을 친다든지, 아니면 그 급등지역의 효과가 다른 데로 나타나는 일종의 풍선효과까지를 고려하면 저는 그것 역시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저희 여당에서 준공공임대주택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지금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한 임대를 위한 규제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민간 임대시장에 그러한 것을 확산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뉴타운 추진이 좌절된 이후에 지금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이 필요하고 저도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일견 일리 있으신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양쪽의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그러한 매몰비용 해소와 관련된 채권자의 손금산입을 인정해 주는, 그럼으로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향후에 있을 어떤 특정 채권에 대한 혜택 때문에 이것이 과세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합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조합에 대한 모럴해저드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측면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지금 조합 해체가 이루어지고 경매처분이 들어가고 난리예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몇 천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이 법이 통과되면 매몰비용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부동산 빅딜,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나성린 의원 제가 몇 개월 전에 이걸 제안해서 우리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빅딜 가능성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기본적으로 그 가능성 문제는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하시겠지만 또 국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저희도 존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경우는 그 빅딜의 내용 중에 담아서 안 되는 측면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린 의원 장관 들어가 주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우리 경제는 국내 인바운드 투자보다 해외 아웃바운드 투자비중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해외 순수출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우선 지난 11월 5일 날 산업위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위원들께서 외국인 투자유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셨습니다. 여기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던 중소기업 업종 보호라든가 경제력 집중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외측법 수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투자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 현상하고 또 외국인의 최소지분율도 현재 10%에서 30%로 올렸습니다. 또 중손회사 남설을 반대하기 위해서 외국인 지분 이외의 모든 지분을 손자회사가 보유하도록 했고요. 또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수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협의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외투기업의 중소기업 잠식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업종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국내 재벌의 우회 투자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나성린 의원** 국내 재벌의 우회 투자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 최소지분을 30% 이렇게 제고하도록 했고 또 우회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지분 이외의 모든 지분은 바로 증손회사가 가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손자회사가 가지도록 했습니다.

○**나성린 의원** 이 정도 수정안이 나오면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충분한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좀 더 노력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들어가시고, 다시 경제부총리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지난 정부의 감세에 대해서 지난 6년 동안 줄곧 부자감세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부총리께서는 그 당시에 정부에 계시지 않았지만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에게만 감세하는 부자감세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자나 중산, 서민층 모두에게 감세하는 국민 감세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감세가 부자감세냐 또는 그런 측면은 감세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부자감세로 명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세의 대상이 부자에 국한되지 않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감세의 귀착 효과가 과연 부자한테 귀착이 됐느냐, 실효세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 오히려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서민층에 더 많은 조세 혜택이 갔다는 측면에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감세의 결과로 결국 경제가 회복되어서 그것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을 유발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부자감세로 명명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바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때 감

세를 한 이유가 뭐지요? 목적이 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기본적으로 바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감세를 통해서 결국은 그러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하나의 수요 창출의 요인이 가장 큰, 다시 말씀드려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정책에서 감세를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당연히 그러한 조세정책 내지는 재정정책의 효과로 2009년도에 OECD 중에 거의 두세 나라 중의 하나인 플러스의 성장을 달성한 배경이 바로 그런 데에 대한 효율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조금만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표를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득세를 보면 사실은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 때 더 부자감세를 했습니다. 국민의정부 때 최고 소득층에 4%p를 인하해 드렸어요. 그다음에 3%, 2%, 최저 소득층은 1%, 4·3·2·1 이렇게 감세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부자감세이지요. 그다음에 참여정부 때는 모든 계층에 대해서 1%p씩 인하했어요.

그런데 이명박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8800만 원 이하 중산·서민층에 대해서는 2%p씩 다 인하해 드리고 8800만 원 이하 부자에 대해서는 안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3억 과표구간 하나 만들어서 3%p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대 부자감세가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앞서 제가 언급해 드린 대로 결국 감세의 효과가 어느 계층에 국한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저것을 어떤 부자의 계층이라고 국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법인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3%p 인하해 드렸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3%p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감세액은 물론 액으로 보면 대기업이 크겠지만 감세율로 보면 중소기업이 훨씬 크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조세의 귀착 면에서 보면 중소기업, 서민층이 훨씬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니다.

○**나성린 의원** 제가 볼 때는 어떤 측면으로 살펴보다라도 이게 모든 국민에게 감세해 준 것이지 부자에게만 감세한 것은 아니다, 또 부자에게 더 감세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감세 규모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은 이명박정부 감세로 인해서 5년 동안 90조 원의 감세가 발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2008년 한 해에 감세한 그 효과가 2012년까지 죽 이렇게 우리가 연장해서 보면 대개 한 88조 정도의 그러한 감세 규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 이후에 또 법 개정을 해서 어떤 일부에서는 또 세율을 높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결국은 2008년에서 12년 5년간에 걸친 감세효과는 한 64조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표를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빨간 박스가 이명박정부 5년에 해당하는데, 저 주홍색이 일부 감세를 철회하고 또 증세를 한 부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명박정부 5년 동안에 한 63.8조 원 감세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것을 5년으로 연장해서 보면 어느 정도 감세효과가 나타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증세도 있고 또 비과세·감면에 대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저기 슬라이드에서 나왔듯이 한 35조 원 규모의 감세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순감세 효과는 35조입니다, 90조가 아니고. 그런데 이 35조를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하더라도 이게 부자나 대기업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렇습니다. 모든 계층에 다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증세를 논의해야 된다, 부자감세의 처리를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세수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기본적으로 앞서 이 정부 출범하면서 소위 재원조달 방안에

서 밝힌 바와 같이 크게 봐서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세원을 확보하는 차원에 초점을 뒀서 비과세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고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세원 확보에 하나의 기본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1단계로 일단 걷을 수 있는 세금은 다 걷어 보자는 거지요, 그렇지요?

2단계로 그것이 만약에 부족하면 국민 대타협을 통해서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도 논의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걷을 수 있는 것을 다 걷어 보자는 방안이 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아까 언급해 드린 대로 현재 많은 경우에 지적된 비과세 특히 감면 이것은 상당 부분 대기업이라든지 고소득층에 그런 것이 치중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세법 개정에서도 저희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게 바로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비과세·감면을 통해서 저희가 한 18조 원 규모의 향후 5년 동안 그런 재원조달을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27조 원 규모는 벌써 지하경제 양성화, 특히 FIU법이 이제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런 조세정보 교환을 통해서 특히 역외탈세라든지 또는 전문직 그다음에 민생과 관련된 그러한 지하경제에 관한 조세를 우리가 세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면 저는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핵심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겁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바꾸려고 그러니까? 왜 반대를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는 그 자체에 반대하셨다고보다도 접근 방법이 어떤 세율의 인상을 더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서도 언급해 드린 대로 오히려 그런 직접적인 세율의 인상이라든지 다시 말씀드리어서 새로운 세목의 신설보다는 바로 그러한 비과세·감면이라든지 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의견의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이 전환 방법이 공평성을 높이면서 비과세·감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야당이 그때 반대한 것은 물론 고소득층에 대해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만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소위 말해서 중산층 세금 폭탄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당초 우리가 초안에 비해서 중산층에 혜택을 좀 더 드리기를 위해서 그런 구간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 2조 정도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는데요. 그중에 대기업이라든지 고소득층이 한 3조 정도 되고요, 서민층 또는 중소기업에서 한 1조 정도는 오히려 감액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서 전반적으로 한 2조 정도의 세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인 세제개편의 효과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꿀 때 어느 정도의 세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한 8500억 정도……

○나성린 의원 8500억 정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그렇습니다.

○나성린 의원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추가해서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을 1억 5000으로 인하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꿀 때 고소득층에게 굉장히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또 야당 주장에 의하면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난번에,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작년도에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우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조세 형평성을 더욱 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히려 새로운 과세구간을 낮춘다기보다는 현재 정부안이 좀 더 바람직하고 세수 측면에서도 현재 정부안이 좀

더 우월한 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우리 소득세제가 지금 누더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학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에게만 증세하는 방법은 이미 누더기가 된 우리 소득세제를 더 누더기로 만든다……

제가 물가상승과 경제성장을 감안한 과표 조정과 세율 조정을 동시에 해서 부끄럽지 않은 소득세제를 만들기 위해서 소득세제 법안을 발의한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알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과세표준 구간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조정해서 상당히 고민해서 여러 가지로 안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세소위에서 정부안과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린 의원 지금 야당 의원님들은 또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재원 확충 방안으로 세율 조정에 대한 것은 흔히 나오는 주장입니다마는 최근의 경향은 법인세율의 인하가 오히려 경제에 도움을 줘서 그것은 다시 법인세수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런 경험적인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앞서도 언급해 드린 대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 아직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율의 인상은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오히려 당초에 의도했던 효과를 못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저희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더 확보하되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간접증세…… 간접증세를 해 왔지요, 지금 대기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대기업에 대해서 R&D에 대해서 손금산입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고용창출 세액공제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이 누렸던 혜택을 축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과세를 정비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



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율의 조정은 한편으로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평성의 차원에 다른 대안이 보다 더 우월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현재 법인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 저희가 대기업에 대해서 증세를 하지 않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동안 최저세율을 14%에서 16%로 올렸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기업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다 없앴지 않습니까, 거의? R&D투자세액공제 대기업에 대해서 더 많이 지금 없애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분명히 홍보를 해 주세요. 대기업에 대해서 우리 증세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건 홍보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알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들어가시지요. 감사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님들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부자나 재벌을 위한 법안이라고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표 정책이라고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이라도 경제활성화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을 내놓으셔야 하는데 제 눈에는 지금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소득세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외국인투자 촉진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코넥스시장투자 조세감면,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장내 소란)

아니, 상의해서 수정·보완하면 되지 않습니까? 서비스발전 기본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국민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그리고 창조경제 관련 법안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감세, 규제 완화, 개방 확대, 공기업 민영화 등인데 지금 이것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조경제란 것은 이념과 무관하게 진보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도입 통과시켜 주십시오.

코넥스 상장기업은 창투조합 투자 제한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전문엔젤 도입 및 벤처 확인제도 개정,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코넥스 시장 지원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끝으로 몇 개 남은 경제민주화 법안, 여야가 잘 상의해서 처리되도록 새누리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경제활성화 법안과 창조경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들을 정치 쟁점과 연계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법이고, 성장잠재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경제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야당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희** 다음은 경기 남양주갑 출신의 민주당 최재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의원**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남양주갑 출신 최재성 의원입니다.

야당의 진단과 또 국민의 걱정은 대통령과 여당의 그것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경제정책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전면적인 선거 개입으로 인한 국정 혼란, 여야의 대치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

도 또 박근혜 대통령도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국민통합적 정책과 침로를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서정연설을 하는 것은 2014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 의원 총리께서는 이 시정연설 내용 작성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신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많은 부분은 안 했지만 평소에 말씀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최재성 의원 그리고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시기 전에 시정연설문 입수해서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봤습니다.

○최재성 의원 그리고 의견 제시하신 것 있습니까? 수정이나 보완 의견 제시하신 것이요.

○국무총리 정홍원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최재성 의원 왜 국가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인지, 왜 여야의 정치적 대치가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를 해서 빨리 끝나야 되는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가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이었습니다. 내용상의 아주 기본적인 오류조차도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겠습니까. 화면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를 내년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예산안은 국회에 넘어 왔습니다. 돌봄 서비스 예산 얼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금년의 돌봄 서비스 예산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면 41조인데…… 돌봄 예산 29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 의원 6900억, 70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정부 예산안에 얼마 들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14년도 6100억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성 의원 총리님, 한 푼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 없습니다. 그

런데 대통령께서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안 된 허위 시정연설 내용이자 이미 국회로 넘어온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수반께서 참견을 하신 겁니다.

행정부는 증액에 대한 동의권만 있는 거지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무총리 정홍원 예.

○최재성 의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현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총리가 내용을 전혀 모르네」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정홍원 초·중·등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통령이 공약을 해? 교육감들이 다 공약하면 되지」 하는 의원 있음)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세출 구조조정과 특별교부금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최재성 의원 결국은 이걸 지금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도 교육청으로 전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기본적으로……

○최재성 의원 시·도 교육청 예산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이걸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결국 아닌 것을 대통령이 사실 확인도 않고 마치 정부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IT 기술을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접목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하고 이 관련 예산을 3조 이상 하겠다고 시정연설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비타당성조사 나왔습니까, 결과가?

○국무총리 정홍원 예산 관련해서는 부총리께 좀 물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최재성 의원 아니, 총리가 시정연설문을, 의견도 평소에 제시를 하고 사전에 입수해서 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께도 질의를 할 겁니다.

이건, 타당성 결과도 나오지 않은 것을 대통령이 하시겠다고 한 건 매우 지나친 겁니다. 각료들은 뭐 했습니까? 국가시스템은 뭐 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

(「부총리한테 물어봐요」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성 의원 부총리 물어볼 거예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의 예산이……

아니, 부총리 나와 주세요. 총리께서 지금 잘 모르시니까 부총리 나와 주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좀 그래 주십시오.

○최재성 의원 그리고 총리께서는 부총리 답변하신 다음에 또 나오실 준비를 하세요.

국정원 예산이, 그러니까 기재부 예산에 예비비로 국정원 예산이 있지요? 이거 타당한 편성이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 편성에 관해서는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에 관한 개선을 여러 가지로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서는 현재의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의원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무슨 사건에 따라서 매번 제도를 바꾸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제도가 지금 현재 규정된 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그것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보완할 게 뭐가 있는지,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만약에 그것을, 지금 존경하는 최재성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투명하고 그런 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 경비 내용상 어떻게 보면 보안이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측면이 있고 또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의원 다른 나라의 예를 한두 가지 들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자료, 여기 좀 있습니다. 보면, 미국도 결국은 심의기관이 국회의 정보위로 되어 있고요. 비공개로 되어 있고, 영국 역시 국회 정보보안위로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입니다. 불란서 국회 국방위 비공개, 이탈리아 국회 정보위 비공개, 이스라엘 비공개, 여러 선진국들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합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보위에서 좀 더 투명하고 이런 것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정보위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의원 불편하시겠지만 화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입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는 정보위에서만 심사해서 총액을 예결위로 넘겨서 통과 의뢰해서 본회의 통과하지 않습니까? 예결위에서 심의를 못 합니다, 정보 예산은. 미국은 정보기관 예산 심사를 우리나라의 정보위와 같은 데서 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보고서를 예결위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 및 예산위이지요, 미국은—본회의에서 확정을 합니다. 또 상·하원 세출위 국방소위에서 확정된 프로그램에 세부 자금을 할당합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영국을 보시겠습니다. 영국도 단일 정보 회계에서 모든 예산을 지출하지 기재부처럼 이렇게 숨겨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정보 예산을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다시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합니다.

독일입니다. 동·서독이 분단된 국가입니다. 1970년도부터 이 정보기관 관련된 예산제도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정보위에서 합니다. 하는데, 국회 예산위—독일에서는 의회통제위원회입니다—그리고 우리 정보위격인 특별예산위원회에서 집행내역을 공동 심의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이예요. 미국, 영국, 독일이 그렇습니다.

부총리, 답변해 보세요. 잘못된 사실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적시하신 미국, 영국, 여러 나라를 비롯해서 국회와 또 행정부와의 관계,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소위 말해서 내각제의 통치체제를 갖고 있어서 그런 데서 생각하는 어떤 통제의 수단하고 우리처럼 이러한 대통령중심제하에서의 예산의 통제 수단, 그리고 앞서 언급하신 대로 지금 국회법상에 정보위원회에서 그

런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고 또 그걸 예결위의 심사로 간주한다는 국회법의 규정, 그 취지는 아마 좀 더 정보위에서 예산결산위에서의 심의에 준하는 그런 보다 엄밀한 심사를 하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저희가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의원** 부총리의 말씀이 지금, 좀 더 조사를 해 보시고요. 내각제를 여기에다가 갖다가 붙이시는데요 그것은 논리적인 근거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 살펴보고요.

오늘도 뉴스가 났습니다만 120만 건 또 날랐습니다, 국정원이. 그래서 검찰에서 공소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에 했습니다.

심리전단 예산 쥐야 됩니까?

(강창희 의장, 이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각 부처 내지는 각 기관의 구체적인 예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가지 그 예산의 용도 또 예산의 필요성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의원** 대북 심리전을 해야 될 국정원에서 국내 심리전단을 만들어서 대선에 개입했는데 한 번 공소변경 허가한 5만여 건에서 어저께 신청한 것은 120만 건이 넘고요. 이것도 방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범죄 행위로 확정이 되면 심리전단 예산 쥐야 됩니까, 안 쥐야 됩니까? 그런데 안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안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안보라는 이유로 그냥 다 주고 또 잘못하고, 이게 되풀이되고. 그래서 여야가 또 정쟁을 하고, 또 대통령선거에서 운명을 건 승부를 하고, 그 후유증을 갖고 또 5년 동안 싸우고……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권은 이런 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다 연계돼 있는 거예요.

부총리께서 한번 한 말씀 해 주세요. 이것이 단순히 분리돼서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도 심리전단 예산에 대해서 여야가, 야당은 못 주겠다 그리고 여당은 주겠다고 정보위에서 충돌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산 관련해서 제일 전문가이신 존경하는 최재성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여전히 지금 현재의 국회법에 정보위원회에서 예산결산 시에 규모라든지 또는 세부 내역을 심사하게 되어 있고 그 심사의 강도가 또 그 심사를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것은 정보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예결위의 심사에 있어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점에서도 이런 정보위의 통제를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의원** 부총리님 지금 진심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그래도 경제 전문가 아니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늘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 현재 제도 중에 어떻게 하면 현재의 운영을 개선할까 하는 것을 먼저 접근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의원** 그 의견을 여쭙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바로 그런 점에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최재성 의원** 지금 충분하다고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정보위원회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심사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의원** 총리 나와 주세요.

예산은 국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동전의 양면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 의원** 그래서 정책과 예산은 분리할 수 없는 거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최재성 의원** 국가정보원이나 사이버사령부 같은 경우 국가 정책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속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최재성 의원** 예산과 동전의 양면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 의원** 그런데 이 대선 개입 문제로 국회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정책과 예산이 동전의 양면이고 불가분의 관계라면…… 지금 올해 예산 심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최재성 의원 그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무조건 민생 때문에 예산 해 달라는 이런 여당의 주장에 야당이 동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엉터리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와 처벌의 단계에 있고 그런 점은 그 문제대로 처리할 일이고, 예산 문제는 국가 기능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성 의원 언제 총리님 취임하셨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금년 2월입니다.

○최재성 의원 2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이 대선 개입 사건을 가지고 국회가 계속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최재성 의원 무슨 해법을 제시를 하셨습니까? 혹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밝히고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 책임을 지우겠다는 입장이고, 또 최근에는 특위를 구성해서 제도 개혁할 점이 있으면 하자는 여당 측의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국회의,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최재성 의원 처음에 73건으로 시작된 국정원 댓글 사건입니다. 오늘부로 120만 건이 됩니다. 또 다음에 몇 백만 건이 될지 모릅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여당 국회의원님들도 “미미한 문제를 갖고 왜 그러냐” 이게 처음에 항변이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20만 건입니다.

‘봇’이 뭔 줄 아세요? 이번에 봇(bot) 시스템을 통해서 전파했다고 공소장 변경 내용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봇’이 뭔지 모르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서 봤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소장 변경을 하고 추가 범죄 사실을 밝히고 하는 것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봐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재성 의원 이번 변경 허가 과정에서도 이진한 2차장에 의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보도 접하셨

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못 들었습니다.

○최재성 의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라고 얘길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윤석열 팀장 찍어내기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공정한 수사입니까? 수사팀이 압력을 안 느끼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철저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 기소를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수사팀을 찍어낸다는 거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재성 의원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수사를 방해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계속 수사 방해를 했는데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그렇게 또 할 사람도 없습니다.

○최재성 의원 아니, 지금 황교안 장관이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으로는 수사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윤석열 팀장의 문제, 지금 수사팀의 문제, 지금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고 장관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걸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또 황교안 장관이 그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 방해지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온 사실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고 추가 기소를 하는 것은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의원 국민과 야당 그리고 언론은 수사 개입했다고 보도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근거도 있습니다. 여기서 국론이 분열되고 여야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해법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지금 수사, 검찰 수사에 맡겨 달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각종 압력과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주장하고 확인되고 보도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주장하는 건데요.

특검에 대해서 총리님 의견을 얘길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을 했고 법무부, 대검 등에서 검찰 조사를 한 것도 있고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검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지금 대부분의 사실에 대해서 기소가 되어 있고 오늘도 추가로 기소가 될 만큼 수사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지금 특검을 논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자꾸 논란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재성 의원** 두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야당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특검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고, 특검은 민간인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 수사 라인도 다 검찰에서 파견이 됩니다.

두 번째, 국정원뿐만이 아닙니다.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그래서 국가기관에 의한, 권력기관에 의한 대선 개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시 수사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1년이 넘게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NL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당이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127석의 야당입니다. 특검 해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 안 나올 게 더 나올 거라는 어떤 숨겨 놓은 사실이라도 인지한 게 있는 겁니까?

이렇게 긴 터널에서 못 빠져나오니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서 예산 심의도 원만하게 하고, 정책과 예산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 여기서 탈출구를 찾자는 것이지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안 됩니까?

그리고 이게 국정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이버사령부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니라고, 혐의 없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정도 사안이면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털고 가야 될 문제고, 그렇게 하시라고 현재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보필하고 그렇게 충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당이 이것 물러나지 않으면 국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털고 가자는 거예요. 박근혜 대

통령이 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시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초기 단계라면 저도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부분이 기소가 되어 있고 지금 또 밝혀진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재성 의원** 사이버사령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상황에 있고 재판 중에 있는 상황이고……

**○최재성 의원** 국가보훈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국무총리 정홍원** 사이버사령부에 대해서는……

**○최재성 의원** 그것도 믿고 기다려 달라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그것은 군 범죄에 대해서는 군이 수사하는 것으로 헌법이나 군사법원법의 정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성 의원** 압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도 수차 정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 부분 진전이 되어 가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또 뭘 새로 하자고 하는 거나 이런 것이 저는 법리적으로 사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재성 의원** 총리님, 국정운영은…… 그리고 집권세력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은 1cm도 나가지 못하는 여야의 갈등을 해결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설령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정국의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연말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설령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잘했다 하더라도 공인으로서, 국가시스템을 담당하는 일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못해서만 사퇴합니까?

이런 엄청난 사안을 놓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이런 정부를 놓고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것 해결 못하면 다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충돌할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사이버 사건에 대해서는……

**○최재성 의원** 제가 드리는 질문에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더 지속이 되면 전부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법을 제시를 해야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해법이, 기소되어 있어서 재판이 되고 있고 또 사이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사이버 사건에 대해서는 엄청난 의지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수사를 소홀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는 전연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연내에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성 의원** 그런 말씀 계속하실 거면 전부 사퇴해야 됩니다.

야당만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집권한 거고요, 그래서 책임 있게 국정운영 하는 겁니다.

총리님이 붓입니까?

이 붓이 뭘 줄 아세요? 자동으로 혹은 반자동으로 이미 입력된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트위터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력하면 이것 퍼 나르는 그런 겁니다.

총리님이 붓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책임감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를 하기 때문에, 밝혀지는 사실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한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의원** 들어가 주세요.

이런 긴 터널이 계속되면 내각은 총사퇴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석** 최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동구·옹진 출신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 서해 5도 NLL을 지역 구로 두고 있는 박상은 의원입니다.

내일모레면 11월 23일 북한의 만행인 연평도 피폭 3주년 기념일입니다. 이런 착잡한 기분을 갖고 오늘 국정 전반에 대해서,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

각합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신데요.

어제 백군기 의원님께서 NLL의 등거리 그다음에 등면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총리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하신 것 같아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우리 박근혜정부가 얘기하는 DMZ의 평화공원은 DMZ 안에서 그야말로 등거리·등면적이지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등거리·등면적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연평도 쪽에는 우리가 바다를 많이 줘야 되고, 이 가치가 없는 백령도 쪽에, 서해 쪽에 우리가 면적을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등거리·등면적이 엄격하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께서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길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 양쪽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DMZ 내에 있기 때문에 그쪽의 역할이나 기능이나 또 이쪽 NLL 쪽의 면적을 떠나서라도 성격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은 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그것은 종로 땅 1만 평하고 백두산 밑에 있는 땅 100만 평하고 바꾸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뭐 차이가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렇지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서해 5도 또 연평도 주민들한테, 또 내일모레가 연평도 피폭 기념일인데 한 말씀 좀, 위로말씀 좀 해 주시길요.

○**국무총리 정홍원** 연평도 포격 도발 3주기를 맞이해서 제가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입니다.

저희 국가, 정부 입장에서는 연평도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또 연평도민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깊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생업에 전념하셔서 좋은 수확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상은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지지요.

우리 현 부총리님 나와 주시길요.

연일 우리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수고 많으신데, 뭐 평소부터 우리 수도권 경쟁력에 대해

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빅딜을 하면서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건설하면 수도권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했는데, 이것 실상이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현재 여러 가지로 수도권에 그런 경제활동의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수도권 문제를 볼 때는 수도권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른 지역과의 어떤 형평성 그리고 또 수도권 내에서의 어떤 불편성 이런 걸 같이 아마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지난번에 사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 부총리께서 공항·항만 배후단지 그리고 산업단지부터 점차 완화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1차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 수도권의 발전에는 전혀 턱이 없습니다.

2차 조치를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정부가 생각하는 규제는 어떻게 보면 규제의 지역을 겨냥해서 접근하기보다는 기능적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려서 입지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또는 산업단지 면에서 불편한 것이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기존의 지역적인 제약, 다시 말해서 수도권정비법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2차 조치가 지금 계획이 없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지금 말씀하신 수도권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 3차에 걸친 투자활성화 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되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투자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다음에 우리 수도권에서 GTX 세 개의 노선이 있는데, 예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알기에 지금 현재 KDI에서 세 개 노선을 같이 추진하는 안하고 또 각 노선별로 단독 추진하는 것을 분석 중인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GTX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것 연대로 결과가 나오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희가 가끔씩 빠른 시일 내에 예타 결과가 나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게 지금 언론에 보면 셋 중에서 하나를 먼저 하고 두 개는 보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타 결과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예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다음에 우리 인천신항 중심, 얼마 전에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정대로 잘 가고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이것 역시 금년 6월 달에 타당성 재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예산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현재 KDI에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부총리님은 나중에 다시 얘기 좀 더 할게요.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오시지요.

서 장관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 의원하고는 국토교통 상임위에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좀 간단히 현안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창조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영종도 복합도시법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현재 의원님 발의하시 가지고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부처 간에 이견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그 법안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아무튼 그쪽의 복합개발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총괄을 해서 어떤 TF를 구축을 해서 논의는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지금 사실 본 의원이 이것을 법안도 냈고 또 인수위에다가 제출했을 때는 우리



정부에서는 돈과 인력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제도를 바꿔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결국은 지금 노비자, 그다음에 투자이민 금액과 대상, 그리고 금융자유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지 돈을 주는 게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부가 거부감을 갖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렇지만 그것이 정부의 각 부처별로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조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튼 우리 부가 중심이 되어서 TF라도 만들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석삼조거든요.

지금 중국인들 외자유치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우리 안보까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이것이 바로 융합의 상징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무위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의논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본 의원 또 우리 이노근 의원님이 내신 도정법, 우리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재생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적률을 올려 줘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낸 법안이 있는데요.

지금 이노근 의원은 300% 본 의원은 350%까지 했는데,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그 부분이 현재도 3종 일반주거의 경우에는 200%에서 300%까지 용적률이 법에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법에 규정된 것보다 낮은 상태로 조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법에 고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어차피 현재도 국토계획법상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든지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하는 경우에 법에 정해진 용적률의 2배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0%를 갖다가 조례에 관계없이 해 주고 있더라

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협조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우리 나성린 의원께서 부동산 활성화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법안을 국회에서 지금 안 통과시켜 주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런 것은 또 제가 볼 때 우리 정부와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특례조항의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금융위원장님 좀 나와 주세요.

신 위원장님, 지금 우리 한국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의원님 지적대로 그동안에 우리 실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다만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겸허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왜 부족합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보수적인 운용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 위주의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박상은 의원** 얼마 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대한민국 금융이 81위로 나와 있던데, 제가 볼 때 조금 과장된 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실물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박상은 의원** 세계 30대 선도금융에서도 우리가 안 들어가 있지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소위 FSB에서 발표한 글로벌 SIFI라고 그래서 대형 금융기관에 우리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박상은 의원** 저는 이것이, 우리 정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보호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칸막이 규제를 좀 털어내고요, 그다음에 실물을 지원할 수 있는 해외 플랜트라든지 건설 이런 쪽의 지원, 또 담보 위주의 영업에서 기술력 평가를 하기 위한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와 아울러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것도 만들어서 저희가 다음 주에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산업에 우리 금융이 핏줄인데 지금 기업에서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국내 경기가 어려울 때 해외건설이 나가야 되는데, 해외건설이 경쟁력이 충분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여러 가지 지난번의 경험으로 봐서 실패한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즉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또는 무역보험공사라든지 정책금융공사·산업은행 이런 데를 통해서, 협조유자를 통해서 저희가 해외 플랜트나 건설 쪽에 지원을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박상은 의원 얼마 전에 일본 아베 총리가 우리 대한민국 금융에 대한 얘기를 한 것도 기억하시지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에서 은행이 돈 버는 것보다 해외에서 4배를 더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금융에서 완전히, 정말 바다에서 손으로 땅 짚고 헤엄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그런, 손쉬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게 한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글로벌 회사들은 반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단기간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 아시아를 중심,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을 해서 조만간에 우리나라 금융의 수익구조를 해외가 상당히 많이 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또 요즈마펀드 아시지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박상은 의원 이것이 우리 창조경제에 좀 도움이 안 됩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저희가 사실은 요즈마펀드를 벤치마크를 해서 성장사다리펀드를 지금 6조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부터 시작해서 성장 그다음에 회수 그다음에 제도 지원까지 일련의 벤처생태계, 창업생태계를 만들어서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상은 의원 그다음에 창조경제는 결국 창조 금융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벤처기업들이 나중에 잘못되면 은행은 괜찮고 기업인만 다 죄인이 돼요.

요즘도 신문에 보면 그 기업인들만 죽일 사람이 되는데, 왜 그런 풍조를 만듭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의 책임, 그런데 물론 대기업의 부도덕한 부분은 비난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열심히 했는데 불가피하게 한 중소·벤처 이런 데는 저희가 제도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채무불이행자에서 해제를 시켜 주고 그다음에 보증제도라든지 이런 데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지금 많은 국민들이 금산분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도 사실 여기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금융의 취약성·후진성이 지금 문제되는 건데.

○금융위원장 신제윤 금산분리가 산업이 금융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남의 돈을 이용해서 경영권을 유지한다든지 또는 자금조달의 편의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금산분리를 포함해서 지금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지금 저희 국회에서도 힘을 더 보탬 테니까 힘내서 우리 금융 튼튼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고맙습니다.

다시 현 부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지금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말 우리 지상 과제인데 지금 경제활성화를 하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투자 주체가 정부와 우리 민간기업인데, 그리고 지금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이 세 가지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전체적으로 봐서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상은 의원 뭐 여러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건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겁니

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큰 틀에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러면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투자여력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기본적으로 정부가 SOC 분야 이런 쪽에 그동안에 투자를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상대적으로 복지지출이나 그런 것이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 때 과거에 비해서 그런 직접적인 투자의 여력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지금 우리가 남유럽 사태를 보면서 소위 말하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데 IMF에서는 우리 공기업 부채까지 합쳐서 70% GDP를 건전하다고 보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IMF는 현재 좁은 의미에서의 소위 국가 채무에 대해서 한국이 OECD의 어떤 나라에 비해서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우리는 지금 중앙정부가 한 34%, 지방 공기업이 한 36%, 사실 이것 말고도 우리 지방정부라든가 또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한 100%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우리가 그 부채의 규모를 어떠한 시각에서 또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가 채무입니다. 특히 국가 채무 중에서 적자성 채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상태로 봐서 국가 채무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재정의 건전성은 잘 관리를 해야지 더 이상 악화되면 그것이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다든지 또는 위기 시에 결국 국가가 그런 걸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본 의원 얘기에 공기업 구조조정을 연내로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좀 나오더구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느 부처 장관에게 책임을 지우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좀 책임 회피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공기업 부채

는 어떻게 보면 국가 부채보다 지금 현재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공기업 부채하고 관련 돼서 공기업 자체의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기업 정책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가 담당을 하지만 그 사업에 관해서는 각 부처에서 그 공기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각 부처의 주무 장관들께서 공기업 문제를 심각하게, 또 공기업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기업과 협의해서 만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국가시책으로 하는 4대강이라든가 또는 한전이라든가 또는 해외자원 에너지 개발 이런 것들은 정부의 책임이 더 크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공기업 부채의 원인은 물론 그동안에 일부는 정부의 정책 또는 일부는 공공요금 조정의 미조정 또 일부는 공기업 자체의 의욕적인 투자 이런 데 여러 개의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원인은 어떻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은 규명을 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고쳐져야 된다, 또 그런 의미에서 각 기관이 구조조정을 하고 또 좀 부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본 의원이 6년째 국감을 하면서 항상 나온 것이 공기업의 부패, 도덕적 모럴 해저드 이런 것들이 큰 문제인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느 신문에 ‘공기업 직원 법인카드로 연 5075억 평평’ 이런 타이틀이 나오는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정말 강도 높은 그런 공기업 구조조정을 해주기를, 그런 대책을 세워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공기업의 상황을 저희는 국민한테 공개하려고 그러합니다. 공기업 부채뿐만 아니라 방만경영 내용을 공개를 하고, 또 부채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정부 정책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투자의 좀 잘못된 방향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저희는 구분회계라고 해서 이것 구분해 가지고 분명히 밝혀 두고, 또 거기에 따른 자산의 매각이라든지 이런 구조조정 또 지금 지적하신 방만경영 문제를 정말 박근혜정부

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박근혜정부에서는 2017년에는 국가 부채를 몇 %, GDP 대비 얼마로 세우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지금 현재 내년도에서는 정부 적자가 금년과 같은 1.8%로 해서 다소 채무가 올라갑니다만 2017년 가면 한 2016년을 고비로 해서 채무에 대한 비율이 점차 떨어져서 대개 35%대의 그러한 국가 채무 비율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러면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로서는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투자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우리가 지금 보편적 복지 때문에 더 그렇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복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수행을 하되, 복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우선 복지의 전달체계 같은 데에서 누수 현상 같은 것을 막고, 또 복지도 맞춤형 복지라고 이것이 복지의 지출에 관한 사항이고요.

복지의 재원도 그것이 어떤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앞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비과세라든지 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원의 확보를 통해서 그런 복지재원을 포함한 국정과제 지원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지금 보편적 복지, 사실 어느 국가나 이것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부총리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의 공간이 비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는 공간이 비었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우리가 늘 앞으로 있을 노령화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재정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건실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아니, 대통령께서 청와대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공간이 너무 비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동의 안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국가의 어떤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게 바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가의 채무 상태가 어떤지 또는 국가 재정의 적자 규모가 어떤지 그런 것을 판단할 때……

○박상은 의원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

리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되지만 그러나 현재 국가가 어려우니까 부총리께서는 보편적 복지 보다는, 제가 볼 때는 30% 이하의 우리 정말 국가의 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는 것이 더 빠른 것 아니냐, 그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복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국정과제에서 저희가 제안한 그런 포괄되는 복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의 포괄적 성장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공약에서 밝혀진 복지 내용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어제 쇼킹한 신문이 나왔는데 ‘복지 연간 100조 시대에 월 11만 6800원 장애연금뿐’ ‘간병 25년, 살길이 없었다’ 또 다른 신문에서는 ‘아들아, 미안하다’ 그래 가지고 집을 불 지른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복지 100조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편적 복지를 떠들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지금 형편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있는지 모르지만 집행 능력도 없고 또 재정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되 우리 지금 현재는 경제성장 에 더욱 몰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도 존경하는 박상은 의원님 말씀대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정부가 이러한 복지사회통합망 같은 것을 좀 더 촘촘하게 짜고 또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그런 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대선 과정에서 복지공약 이행에 지금 우리가 134조, 135조의 돈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전반적으로 복지에 필요한 국정과제에 135조……

○박상은 의원 그러면 인수위에서는 얼마로 확정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인수위하고 거의 같은 규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저희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도 오셨고 그런데 지금 제 주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우리 한국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현명하신 분들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나 오늘 편하자고 내 자식, 손자들한테 부채를 넘겨주느냐’, 현명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보편적 복지에 매이다 보면 사실 나라가 좀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바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을 짜고 또 재정계획에 따라서 그러한 국가 채무의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가 전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고, 또 복지에 있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데 복지가 가계꿈 장치를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다음에 지금 경제 주체 하나 중에 우리 민간기업인데요, 요새 민간기업의 투자환경 잘 조성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민간의 투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활성화고 또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12월로 예정된 4차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우리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법이 여러 가지 축소를 채운 법도 있어 가지고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왜 이렇게 세무조사가 심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세무조사는 저도 국세청장하고 여러 번 논의를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하는 세무조사는 성실하고 또 그런 데 대한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역외탈세라든지 고소득 또는 전문층 이런 것을 타깃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성실한 기업들이 불안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늘 그런 것을 인식하고 세무조사를 하도록 저희가 국세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것을 통해서 기업이 건전해질 수도 있지만 작년엔 930개, 금년에 1170개입니다.

작년보다 지금 30%를 더 하고 있고 기간도 작년에 보통 3~4개월이었는데 금년에는 6~8개월로 올라가니까 회사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세무조사 자체 건수는 상반기로 대비하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실 납세자와 또 중소기업자가 세무조사로 위축을 받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저해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지금 추정금도 작년보다 거의 한 50% 이상 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가진 통계는,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상은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국세청이 직무를 열심히 안 해 가지고 한 것이든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정부가 금년에도 세게 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어떤 의미에서 봐서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측면에서 세원의 확충 과정에서 또 그런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은 의원** R&D 세제 공제도 지금 축소시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주로 그동안 이러한 세제, 비과세·감면이 대기업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감면 조치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이것도 그나마 일몰이 내년도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2014년까지? 이것은 어떻게…… 아직 검토 안 해 보셨지요, 연장에 대해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기본적으로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몰은 종료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함으로 해서 비과세·감면 조정에 따른 세수의 확보를 모색하고 있고요. R&D……

○**박상은 의원** 본 의원도 사실은 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유보를 시켜 주면 투자를 한다고 봤는데, 지금 약 470조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여러 가지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업도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로서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또는 기타 투자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세계상의 지원을, 특히 중소기업하고 벤처창업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투자 활성화 대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경제 투자 주체는 정부하고 민간 기업인데 민간기업 투자 분위기 좀 살려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큰 방점이, 금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펌프질을 했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경기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풀무질에 해당되는 그런 조치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나오시지요.

소위 말하는 경제민주화 또 헌법 119조1항과 2항,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항이 주이고, 2항이 보충하는 제도가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은 의원 그것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박상은 의원 그러면 현재 경제민주화 법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니겠어요?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헌법 119조2항에는 ‘경제의 민주화’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경제민주화 명칭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은 의원 바이마르 헌법 중에 경제민주화라는 법을 한 나라가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어느 나라든지 헌법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은 의원 시장경제 살리려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정부가 입장을 세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시장경제가 원칙인 것은 확고합니다.

그러나 그게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은 의원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취임사에서 제 2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가 형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제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석 박상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영등포갑 출신의 민주당 김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병석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난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도 예산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명박정부 때 파탄 난 서민 경제와 관련된 현안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부자와 재벌들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연설에 국민들은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1272조 원으로 세계 13위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1000조 원대의 가계부채, 사실상의 실업자 390만 명, 매년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40만 명입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 125만 명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서민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의 온기가 특정 계층에게만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상위 10%의 부유층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하위 10%의 10배를 넘어섰습니다. 자영업자 2명 중 1명은 월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고달픈 현실이 이명박 정권의 5년의 경제성적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에서도 힘없고 어려운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준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지금 심각하냐고 여쭙어 봤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당장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잠재적 위험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의원** 총리께서 그런 안이한 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 한국은행이 처음 공개한 경제주체별 통화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가계 보유 통화량 증가율은 2.5%인데 기업은 가계보다 3배 이상 높은 8.3%로 조사됐습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시중의 돈이 가계로 흘러가지 않고 기업에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가계부채가 1000조 원대가 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등록 대부업체 거래자가 2009년 말 167만 명에서 지난해 25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영주 의원** 그렇다면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 숫자 알고 계십니까? 나타나지 않고 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정확하게는……

○**김영주 의원** 등록된 대부업체의 평균 이율이 38.7%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의 평균 이율, 금융감독원 조사에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한 50%……

○**김영주 의원** 그렇습니다. 52.7%입니다. 이런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면서 우리 서민들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상당히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이게 가계부채 1000조가 지하경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에서 받은 그것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얘기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런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신용불량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에 고통받는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대선공약에서 18조 원의 행복기금 조성해 320만 명의 서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영주 의원** 그런데 얼마 조성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1.5조 원에 출발했습니다.

○**김영주 의원**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서민금융 전담은행을 설치해야 된다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기존 정책,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서민 형태의 서민금융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예금을 통해 대규모의 대출 확대가 가능하고 또 낮은 조달금리로 대출금리가 제2금융권보다 낮게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저희는 서민금융 전담은행을 꼭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전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 64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쳤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문제가 우리나라 국민고통지수 1위인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영주 의원**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연간 5만 가구에 5조 원 대출 지원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견 빛을 내서 전세 얻으라는 정부 애긴데,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드림전세, 행복전세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실적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총리, 2개월 됐지요? 그러면 드림전세 몇 건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드림전세는 그동안 실적은 한 2건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행복전세가 222건으로 144억인데, 5조인데 대한민국에서 전월세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이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그러면 두 달 사이에 너무 많은 국민들이 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데 이걸 실패한 정책입니다. 빛을 내서 전월세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드림전세는 지금 한 2건 정도 실적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미미한 상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영주 의원 지금 2개월 2건을 실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아주 미미한 상태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는 한편, 다른 지원을 통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전월세 대책 강구해야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심해 법안 통과 막았습니다. 실효성도 없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로 국민을 호도하고 전월세 대책으로 밀어붙인 결과 지금 대한민국 고통지수 1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그리고 분양가상한 폐지 등 부동산 부자와 건설업체에 특혜 주는 법안만 언급했지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전월세 폭등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안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대통령을 대신해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시정연설에서 ‘특단의 부동산 대책’이라는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주 의원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에 대해서.

○국무총리 정홍원 그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매매를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전세제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김영주 의원 총리, 대한민국 국민의 고통지수 1위입니다.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서셔야지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활성화함으로써 해서 전세수요를 줄여 나가고 또 전세공급을 늘려 나가고, 금융지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픔을 왜 정부가 모르겠습니까?

○김영주 의원 대통령께서 부동산 부자, 건설업체에 그런 거를 연설하실 게 아니라 정말 중산층

과 서민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정부에서 속히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전월세 상한제 등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총리께서는 지난 10월 2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진흥법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똑같이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관광진흥법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영주 의원 마치 이 두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같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총리, 관광진흥법안은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인 경복궁 옆에 특정 재벌이 호텔 짓는 것을 허용해 주기 위한 법입니다. 관광진흥법이 아니라 경복궁 훼손법입니다.

자금성이나 베르사유궁전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영주 의원 그러면 그런 문화재 옆에 호텔 같은 대형 숙박업소 있는 거 찾아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주 중요한 지역은 피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그러면 경복궁은 어떤 곳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지역도 아주 가깝고 그런 것은 피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경복궁 옆에 지금 호텔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살던 앞마당에, 우리나라 국민의 역사와 문화 중심지에 대기업이 그 옆에 호텔을 짓는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문화재나 그런 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벗어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주 의원 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앞마당입니다. 왕이 살던 거기에……

○국무총리 정홍원 문화재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김영주 의원 문화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살던 그 앞에…… 지금 총리께서는 여기에 그러면 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제가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영주 의원** 우리나라 대기업 한진에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근에 학교가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물론 대법원까지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갖고 시정연설에서 허용해 주자고 밀어붙였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밀어붙인다기보다는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 총리!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데,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법에 대해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민생을 위해서 좀 도와주시라는 호소를 드린 겁니다.

○**김영주 의원** 그러면 청와대 앞에도 호텔을 지어야 되겠네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문화재나 학교나 이런 것은 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주 의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대법원에서 불허 판결이 났으면 여기서 접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경제를 위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관계 장관에게 물어보시면……

○**김영주 의원** 왜 제가 총리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총리와 대통령께서…… 총리께서 담화문에 발표를 하셨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다면 총리께서 이거는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 문화용성과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 강조하셨습니다. 경복궁 옆에다 호텔이 들어서면 것을 허용하자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문화재에 대해서 훼손을 하거나 저해하자는 뜻은 없습니다.

○**김영주 의원** 재벌 특혜법인, 경복궁 훼손법인 관광진흥법 개정 즉각 철회하는 게 맞습니다.

총리,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통과되면 수혜받는 곳이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입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꼭 특정 기업을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조건하에서 이루어진다면 다 같은 균형적인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김영주 의원** 대통령과 총리께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통과되면 2조 3000억 원 규모의 공장 착공으로 1만 4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된다고 하셨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영주 의원** 현재 GS칼텍스, 자산 22조 원에 고용인원 3300명입니다. 그리고 SK종합화학, 자산 5조 원에 고용인원 1183명입니다. 그런데 1만 4000여 개 일자리 창출이 어떤 산출에 의해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업계에서 예측한 자료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상의 취업유발계수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산출한 수치입니다.

○**김영주 의원** 파라자일렌이지요, 파라자일렌?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 그 취업유발계수 적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받았습시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자일렌은 화학제품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화학제품에다 취업유발계수 적용했는데 그게 최대치가 1만 4000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석유화학 기초제품입니다. 이것도 높게 잡아야 4100명입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공청회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영주 의원** 거기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정부 측에서 나온 정부 측을 옹호하는 연구원이 “어떤 자료도 없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산업부가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업생산 시 최대 100명, 그리고 간접고용 1000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누가 총리께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 점에 대해서는 법률 심사 과정에서 이게 고용효과가 있느냐 여부부터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가진 자료에 의해서 실무자가 산출한 내용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검토하셔야지요.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시정연설 하는데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데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요.

○**김영주 의원** 근거? 대통령께 누가 보고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점은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고요, 이 수치 가지고……

○**김영주 의원** 총리, 이게 산업부에서 나온 국회 보고자료입니다. 총리께 산업부장관이 보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저는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시다.

○**김영주 의원** 검증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지금 22조 원의 GS칼텍스가 3300명인데 어떻게 1만 4000명 일자리가 된다 그런 수치를 국회에 와서 보고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것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연관산업 일자리까지를 다 포함한 그런 수치입니다.

○**김영주 의원** 간접고용을 쳐서 1000명입니다, 간접고용을.

이게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총리와 대통령께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정부인 산업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산업부에 대해서 이 1000명 이상에 대한 자료를 달렸는데 오늘 아침까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나와서 1만 4000명의 고용 창출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러면 그 산업부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한 것입니다.

○**김영주 의원** 아침까지 산업부에서 근거자료 못 내놨습니다. 이것 산업부 자료인데 제가 총리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맞는다 그러면 대통령께 거짓 보고한 총리와 산업부장관이 국민들에게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저희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김영주 의원** 총리 말씀을 들으니까 4대강 사업으로 우리 국민을 속인 게 생각납니다.

총리, 4대강 사업 고용 창출 얼마나 됐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9만 명 정도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불신을 받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얘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명박정부가 4대강 강행하면서 34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2조 원 세금 낭비하고 1만여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것, 그것도 가장 최대치의…… 그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이런 내용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어떻게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되면 1만 4000명 이런 고용 창출, 경제적 뺨뺨기해서 국민을 속인 4대강 같은 이런 외국인투자 촉진법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관광진흥법을 경제활성화, 민생법안으로 포장해서 담화문까지 발표하시고 국회에 시정연설을 하신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로 다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회에 호소드리는 장인데 그 충정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총리, 대기업과 재벌의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두 기업에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뺨뺨기 고용효과를 발표하는 정부를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대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려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경제를 살려보자는 그런 충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들어가십시오.

잠시만 제가 이 시간 가지 않고 제가…… 분명히 12시에 제가 질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 이거 한번 제가 총 진행되는 그 속기록을 나중에 보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의장님!

이거 제 의사진행발언으로 보는데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병석** 안 돼요, 안 돼.

김영주 의원,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영주 의원** 제가 12시에, 12시에 받았는데……

○**부의장 이병석**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김영주 의원** 아니, 제 질의시간이 15분인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습니까?

(웃음소리)

나중에 파악해 봐 주십시오. 제가 12시에 시작했거든요.

○**부의장 이병석** 아니야. 그건 전부 다 정확하게 계산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김영주 의원** 나중에 확인……

○**부의장 이병석** 아까 몇 분 남았……

○**김영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 초겨울 날씨만큼 싸늘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서민경제 한마디 말도 없이 대기업,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만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곧 시작됩니다. 이번 예산은 침체된 경제, 서민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서민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경제 희망인 중소기업을 살리는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자영업자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는 깊은 늪에 빠지고 대한민국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서민경제는 회복될 수 없고, 경제 양극화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석** 김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출신의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 이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영양·영덕·봉화·울진 출신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입니다.

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에서 경제활성화, 공약

가계부 이행,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기초를 저해하지 않으며 경기진작을 한다고 하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과 SOC 분야 예산은 줄어들고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8.7% 증가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 과다와 불합리한 경영에 대해 자구노력만으로 구조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주무부처의 강도 높은 개선 대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국책사업 타인지 아니면 기관의 고유 업무 타인지 잘잘못에 대한 솔직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인 4·1 대책과 8·28 대책이 시장에 활력이 될 만한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기도 했지만 후속 범안 처리 지연으로 오히려 시장에 실망감만 키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동결되어 왔던 쌀 목표가격이 지난 5월 2.4% 인상된 17만 4083원으로 4000원 인상안이 제출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많이 부족해서 농민들의 시름은 커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수고 많습니다.

정부가 2014년도 예산 반영 시에 가장 중점사항으로 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방금 언급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경제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그런 예산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석호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예산편성 세 가지 달성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경제성장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재정이 안정되고 나서 그리고 복지지출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그렇습니다.

○**강석호 의원**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가 2014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을 몇 % 예상을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희는 실질로 3.9% 내년도에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그렇습니다.

3.9% 예상을 하고 성장률 전망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부분을 보고 했습니까?

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3.9% 성장을 비교적 중립적인 그런 시각에서 추계를 했습니다.

하나는 금년도에 저희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경제회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회복 대책의 효과가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초에 이르기까지 나타난다 하는 그런 전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추정이, IMF 같은 데서 금년도에 세계 경제성장률을 2.7% 정도 보고 내년에는 3.6% 정도로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수출시장도 확대되리라 그런 전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경기지표가 그것이 산업생산이건 또는 소비자의 심리지수건 아니면 기업의 BSI건 상당 부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점을 감안할 때 저희가 3.9%의 성장을 전망하게 되었습니다.

○강석호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이 경제성장률은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야 되지만 3.9% 예상은 낙관적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연구원 및 세계투자은행 등 모든 유수 기관들이 2014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좀 낮춰서 봤었거든요, 한 3.5%.

그리고 2014년도 재정총량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볼 때 추경 해서 국세수입이 210조 원 정도, 2014년도에는 218조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2013년도 경제성장률 2.7%, 내년도 경제성장률 3.9%, 1.2% 차이…… 여기에서 8조 원의 갭이라 하면, 모두들 얘기하는 거는 1%의 경제성장률이 될 때는 약 2조 원 정도의 국세수입을 보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또다시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 추경을 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불확실성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두 가지 점에서 저희는 그렇게 내년도 세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추계로 대개 작년도와 비슷한 세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개 203조 정도 내외의 국세수입을 전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2조 9000억 정도는 소위 비과세·감면이라든지 또는 지하경제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하고 관련된 세수는 한 200조가 되겠습

니다. 내년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218조 정도의 그런 세수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비과세라든지 또는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을 제외하면 순전한 경기하고 관련된 부분은 한 218조에서 213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경기하고 관련된 세수 전망이라는 걸 보면 저희가 예상하는 조세탄성치, 다시 말씀드리어서 1 정도로 보수적인 탄성치로 보더라도 내년도에 세수 추계는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아무래도 우리 부총리께서는 전문가시니까, 올해와 같이 경제성장률 전망 예측 실패로 또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국세수입을 현 정부안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많이 되어 있지요?

2013년도에 국가 채무 관리계획에 보니까, 현재 우리 국가 채무하고 전체가 얼마쯤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희가 2013년도 추경에 480조 정도의 국가 채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보다 다소 좀 증가한, 저희가 국가 채무가 한 515조 정도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16년부터 다시 이러한 국가 채무가 감소해서 2017년에는 규모로 보면 국가 채무의 규모는 한 610조입니다만 GDP 대비로 보면 35.6%, 다시 말씀드리어서 현재 36.2%에서 이렇게 하강하는 그런 재정건전성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석호 의원 그렇습니다.

국가 채무가 2013년도 현재 480조, 공기업 부채를 또 520조를 더하니깐요 또 천문학적인 숫자 한 1000조가 됩니다. 거기에 지자체 부채가 27.1조 원, 지방공기업 부채가 또 72조 5000억, 이 부분을 더하면 100조 원이 좀 올라가면 전체가 1100조 원이 되거든요, 올해.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소위 말해서 넓은 의미의 공공부문, 다시 말씀드리어서 국가라든지 그런 국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또 공기업의 그런 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정부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채무 관리는 앞서 중기재정계획에서 명시한 대로 그러한 스케줄에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 관리 계획을 좀 준비해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이런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지자체 시도지사 우리 지방 재정 보전 방안의 토의가 한번 있었지요, 회의가, 그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강석호 의원 어땀습니까, 결과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기본적으로 중앙도 좀 어렵고 그렇지만 지방정부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이 결국은 힘을 모아서 국민들한테 편의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재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흠족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지난번에 우리 정부가 취득세 감소분을 지방재정에 보전을 하겠다, 현재 지방소비세 전환율 5%에서 정부는 6%로 인상을 하고 15년까지 11%로 인상을 하겠다 등 해서 많은 세 가지 부분, 기초연금·영유아보육비 이 부분을 토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일단은, 일방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일단은 협의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방의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은 3 대 1 비율로 지원을 하겠다, 영유아보육비 부분은 지역에 10%를 더 인상을 하겠다, 그런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는 정부하고 좀 가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

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처해 있는 중앙정부의 그러한 재정 상황으로 볼 때 저희로 보서는, 물론 지방이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 중앙으로서 그러한 재원의 지원을 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재원의 그런 배분 문제도 어떻게 하루빨리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결국은 세수가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또 그러한 세수가 원활하게 확보가 되면 그것이 또 중앙 차원에서 지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활성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이유를…… 그런 방향의 이유도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좀 정부와 지방이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가 앞장서서 긴밀히 협의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꾸준히 찾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을 또 한 가지 보니까요, 복지분야의 의무지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국가예산 중 한 축을 담당하는 복지분야도 2016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한 50%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본다면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유동성 있는 예산편성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러한 예산기조에 대해서는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떤 기조를 갖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지금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고령화의 진전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수요의 확대 등에 의해서 복지 관련 의무지출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재정에 어떤 의미에서는 의무적 비율, 다시 말해서 재정의 경직화가 결국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복지 지출로 인한 재정의 주름살을 결국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느냐, 결국은 첫 번째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세수를 확대하고 또 그것이 재정건전성을 이루는 선순환의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앞서 오전에도 논의했지만 저희가 그러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증세가 아닌 세원을 확보해서 세입 기

반을 확충해서 그러한 노력을 지속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기재정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지출의 증가율을 결국 세입의 증가율보다 적게 유지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런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복지 지출이 가깝게 복지통합전산망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기한다든지 그런 대응책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예, 얼마 전에 최근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복지보다 경제성장 어느 부분, 또 국민들이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분야는 어디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물론 기본적으로 이것은 성장이나 또는 복지나 이분법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지의 기반 위에 또 성장을 해야 되고 또 성장이 되어야 복지에 대한 재원 조달도 가능하기 때문에 2개를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예, 최근 언론사 발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에게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경제성장이 바로 첫 번째 국정과제이다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우선적이고요. 또 경제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하나만 더 여쭙어 보겠습니다.

복지 재원을 확충해서 SOC 예산을 감축한다, 내년도 예산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희가 SOC 분야는 감축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는 전반적인 조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4대강을 비롯해서 상당 부분 SOC에 치중된 점이 많고, 두 번째는 전반적인 우리의 세출구조가 향후에 복지 지출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저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조정할 때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또 하나 우리가 경기활성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SOC에 관한 아주 급격한 조정은 오히려 그러한 경기 활성화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초 공약

가계부에 비하면 그런 SOC 간 조정을 상당 부분 조정의 폭을 축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현재 우리 일례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상북도 북부와 강원도 남부지역 SOC 부문 투자 실적이 어떻습니까? 충분하다고 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지금……

**○강석호 의원** 균형이 맞다고 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지역별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사진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996년도 보도된 도로망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이 2013년도 현재 고속도로 현황입니다. 이 그림이 2013년 그림이에요. 이 부분을 보고도 지역균형 SOC가 맞다고, 잘 균형발전이 됐다고 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균형발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런 도로 부문에 있어서의 균형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이 부분에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SOC도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에 나누어 주는, 일반적인 돈으로 지급되는 복지도 복지지만 저런 지역 주민들에게는 SOC도 복지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알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갑니다.

다음,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고생 많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 방만경영이 요새 신문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늘어나는 부채, 도를 넘는 방만경영,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동안 좀 경영에 합리화를 기하지 못한 점 또 노사 간의 문제, 또는 정부위탁업무와 자체업무가 혼재하면서 오는 불합리한 점, 이런 여러 가지가 혼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석호 의원**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하세요, 나

누어서.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경영주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서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있어서 정부에서 위탁한 사업과 자체 시행하는 사업이 혼재한 데서 오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그 밖에도 노사관계에서 오는, 노조의 요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좀 방만한 데로 흐른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호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대규모 국책사업 수행으로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 41개 공공기관 부채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강석호 의원** 520조에 달하면서 5년 후인 2017년도에 573조에 달합니다.

LH공사가, 노무현정부 시에 세종시 건설에 총공사비 22조 5000억 중에 14조 원을 LH가 부담을 했습니다. 현재 부채가 138조에 연 이자가 4조 5000억, 일일 이자가 122억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정부 때 4대강 살리기로 22조 원 중에 8조 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했습니다.

또 철도공사 또 에너지 공기업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의 국책사업 대행을 공공기관이 다 한 겁니다. 이게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방만경영, 문제가 있지요.

또 하나는 공공요금 억제로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억제된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정치적 논리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방만경영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참 누구를 탓하기가 힘이 들어졌습니다.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인한 부채 증가,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서 공공기관 운영법상 경영에 대한 감독기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정부에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정부에 있는 건 알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각 부처에……

○**강석호 의원** 기재부에 있고, 또 거기 주무부처에는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이 아주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공기관의 장의 인사 부분

또 소위 낙하산 인사 이 부분들이, 산하기관 장관의 얘기를 잘 들을 것 같아요? 안 듣습니다, 다른 데를 쳐다보고.

이런 관리감독 기능을 다시 한 번 우리 총리께서는 되짚어 줘야만이 아까 얘기한 공공기관의 어떤 체계, 질서, 모든 부분을 짚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오전에 부총리께서 공공기관 개선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기재부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곧 발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위탁공사에 대한 부채로 인해서 5개 주요 기관 부채가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그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해야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토교통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관님 가까이 보니까 되게 미남이시네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강석호 의원** 자, 우리 주택·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아무리 정부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국민에게 이렇게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모든 게 꼭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현재 매매시장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났고 가격 자체도 마이너스에서는 조금 벗어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불안요인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임대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임대시장에서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세시장은 지금까지도 전세금 상승률이라든지 불안요인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향후도 그 불안요인은 상존할 것으로 보이고요. 월세시장의 경우에는 전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자, 지금 이제 각 법안들이 저희

국토위에도 계류 중에 있는데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하고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 이런, 다른 위원회입니다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월세상한제 이 부분에서 지금 전세·월세가 상당히 전세가 고공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상한제를 이렇게 한 번 받으면 어떠냐 그런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월세상한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위적으로 최고가격제의 형태로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적에 최초의 세입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락시키는, 억누르는 안정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그 이후에 들어오는 세입자들한테는 어떻게 되는지, 지역별로 형평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수익률 저하에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이 저하가 된다든지 아니면 유지관리 쪽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 임대주택의 질이 저하가 된다든지 하는 점들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렌트 컨트롤(rent control)을 하는 다른 나라 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혹시 장관님, 개인적으로 우리 야당의 주승용 위원장님이나 이윤석 간사님한테 찾아가서 또 야당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몇 번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저는 여러 번 설명은 드렸습시다마는……

**○강석호 의원** 몇 번 찾아가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지금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고요. 한 번씩 이상은 찾아뵈었습니다.

**○강석호 의원** 그게 한 번씩 이따금 찾아가니까 안 되지요. 죽으라고 다섯번, 열번씩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시장상황도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성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차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의원** 설명을 할 때 그분들이 이해를 잘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게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게 논쟁의 대상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이런 시장에서, 참 어려운 부동산 이런 문제에서는 정부가 좋은 또 맞는 법안을 또 제도를 내놓고 하더라도 참 이런 부분이 막혀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좀 더 공을 들이셔서 가지고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계속 노력을 할 것이 고요.

한 가지 또 물어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법안들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전부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있는 부분들은 쟁점이 있는 대로 깊이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쟁점이 없는 법안들의 경우에는, 그것들 자체가 전부 시장 활성화나 정상화에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합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셔서 가지고 가급적 빨리 통과시켜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호 의원**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리님!

(「잘하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이윤석 간사님 잘 들으세요.

자 총리님, 참 5년의 대통령 단임기간 임기제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속적인 정치·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5년간의 사업계획서가 상당히 짧다고 봅니다. 너무나…… 5년간 하다 보면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오직 앞만 보고 가는 부분보다는 4년의 중임제, 8년 사업계획서를 중간평가 이래로 넣어 가지고 국민에게 재신임받는 4년 중임제로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하시는 우리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개헌에 대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

○**강석호 의원**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강석호 의원**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한 대로 이 모든 것이 하루빨리 잘 해결돼서 국회가 정상화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주 잘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준비 많이 했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병석** 강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호 의원은 민주당 의석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발언대를 내려오셨습니다.

다음에는 같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의원께서 나오실 텐데, 전남 무안·신안 출신의 민주당 이윤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실 때 이번에는 여당 의석에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발언하십시오.

○**이윤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남도 무안군·신안군 출신 민주당 이윤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윤석 의원** 지난번 임시국회에서는 차분하게 답변을 하시던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가끔씩 화도 내시고 또 예민하게 응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그때와 뭐 달라진 상황들이 있습니까, 혹시?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제가 화를 낸 것은 아닌데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이윤석 의원** 아닙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과 국가 정보기관의 대선 댓글 질문만 나오면 총리님의 표정부터가 달라지거든요. 혹시 그걸 본인이 느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뭐,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주의하겠습니다.

○**이윤석 의원** 그만큼 지난 대선 과정들이, 특히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부에게 큰 부담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빨리 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윤석 의원** 어쨌든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윤석 의원** 오늘 검찰 발표에 따르면 지난번 발견했던 트위터 글 5만여 건 외에 새롭게 121만 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숫자는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보도에서 봤습니다만 정확한 실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되었다고 하니까 재판에서 밝혀지겠지만 제가 보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리트위트라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윤석 의원** 우리는 어렵게 이뤄낸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서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렇습니다.

○**이윤석 의원**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선 불복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당에서 수없이 밝혀 왔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윤석 의원** 이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소신 있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철저한 수사라는 말만 반복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나와는 상관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계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총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일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표정도 그렇게 느끼시고 하는 모양인데요. 저도 참, 계속 같은

답변을 하려고 하니깐 매우 안트깝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안이 기소가 되어 있는 마당이고 또 재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 이게 정말 초기, 이제 막 사안이 불거져서 밝혀져서 시작이 되는 단계라면 저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기소가 되어서 대부분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척이 다 되어서 밝혀지고 있는 그런 마당에 지금 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윤석 의원** 저희들은,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총리님께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국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점점 더 꼬여 가고 있으니까 특검을 받아들이자고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저는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이윤석 의원** 총리님은 소신 있는 총리 또 책임총리, 여러 번 책임총리 주장하셨잖아요?

총리님, 참 모두 다들 대통령님 앞에서 말씀들을 못 하시니…… 대통령께 직언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 다 드리고 있고 상의할 것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지금 특검을 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순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소신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윤석 의원** 총리님,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아버지와 함께했던 18년 동안 그 국정 경험을 했던 것을 너무 과신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총리께서도 혹 그런 점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점은 못 느꼈고, 일구월십 어떻게 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할 것이냐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윤석 의원**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을 그 시절과 똑같다고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

문스럽습니다. 총리님께서서는 그렇지 않다 그 말 씀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저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이윤석 의원** 저는 민주적인 국가권력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경제도 살고 중소기업도 산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앞으로 제 소신에 부합하는 그런 점이 있다면 건의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석 의원** 저는 박근혜정부가 실제로 일할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1년이 다 가고 있고 앞으로 2~3년 일하면 레임덕 현상이 옵니다. 보따리를 풀었다가 다시 쌀 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대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의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윤석 의원** 총리님, 시중의 여론을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도 대접받지 못하고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 수석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들 합니다.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걱정을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언론에서라도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의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윤석 의원** 권력의 집중, 대통령의 처분만 기다리는 참모, 모두들 걱정입니다.

우선 전월세 대책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저하고 지금부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상당한 대화를 하셔야 되거든요.

오전에 전월세 상한제는 아주 부작용이 많은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윤석 의원** 우리 민주당이 내놓은 전월세 상

한제가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파악하기에 상승률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또 계약기간을 한 번에 걸쳐 더 갱신하는 그런 내용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석 의원 뒷부분은 계약갱신청구권인데요. 부총리님, 혹시 전월세 생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제가 사무관 때 했습니다.

○이윤석 의원 전월세가 보통 2년 계약인데 지금 저희 민주당이 내놓은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것은 2년을 살고 나면 다시 2년을 한 번 더 살 수 있는, 그리고 세입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제도란 말이에요.

모든 세입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2년만 살고 나가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2년을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런 제도를 반대하는 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 없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세사는 분들보다는 형편이 낫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2년을 사시면서 계획을 세워서 저축도 해서 더 넓은 데로 가시든지, 아니면 집을 구입하시든지 2년을 한 번 더 연장해 주자는 법안을 그런 법률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자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정부가 내놓은 제도들을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왜 그걸 반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현재 전월세를 이용하시는 분의 어려움, 그런 고충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같이합니다. 다만 정책을 세울 때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세입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그것을 비교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석 의원 부총리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어디서 보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국토부 자료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을 살고 난 국민들에게, 전세권자들에게 편하게 2년을 더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했지요. 전월세 상한제는 2년 후에는 적어도 5% 이상은 전세가를 올리지 않겠다, 2억이라면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세입자가 준비를 해달라, 그런 걸 법률적으로 보장을 해 주자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통 40~50%까지 전세가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전월세 상한제, 5% 이상 인상하지 말자.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2년을 살고 나면 2년을 더 살게 보장을 해 드리자 이런 좋은 제도를 정부에서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자료로 무슨 근거로 지금 그렇게 하시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일반적으로 가격 규제를 하게 되면 그 가격 규제가 단기적인 효과로 나타나지만 가격에 늘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응을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있는 분들에게 어떤 가격 규제를 통해서 보호할 수는 있지만 집을 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다음 분들에게는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현재에 있는 분보다 차별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많은 경우……

○이윤석 의원 부총리님, 자료를 한번 띄워서 말씀해 보세요, 자료를 근거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윤석 의원 제가 지금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때 폭등하던 시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건 단 1년입니다. 그 뒤로 91년부터 97년까지 오히려 전세가가 계속 하향된단 말이에요, 전월세 상한제를 했을 때. 저 자료가 지금 국토부 자료인데 부총리님은 어떤 자료를 보고 그런 말씀 하시지요?

(이병석 부의장, 박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는 세 가지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가격 규제보다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야 당연히 가격 규제를 해야지요. 다른 대안이 있으면 가격 규제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보조하는 정책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요, 그것이 지금 정부가 하는 주택바우처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시더라도 상한제 내지는 가격 규제를 했던 나라가 지금은 다 철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런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 번째는 이걸 좀 더 중장기적인 또는 동태적인 시각에서 보면 기존의 세입자를 더 보호해 줄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하고의 형평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석 의원** 지금 부총리님께서 외국의 사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유럽의 1차대전 또 미국의 2차대전, 그리고 일부 보수진영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때는 매우 경직된 집세 통제 시기였던 말이에요. 그런데 부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전세 개념이 없잖아요, 월세 개념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월세에 대한 가격 규제가 있었습니다.

**○이윤석 의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까지는 규제를 피해서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는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문제없단 말이에요. 이 제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럽 1차대전, 미국 2차대전, 그리고 일부 보수진영 논리를 계속 주장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월세 상한제라는 것은 5% 이상을 올리지 말고 전세권자들이 열심히 저축을 하고 노력을 해서 2년 후에 4년 후에는 내 집을 마련한다든지 좋은 조건으로 이사를 갈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것은 2년 후에 집주인으로부터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걸 법률적으로 보장해 주자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정부가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는 존경하는 이윤석 의원님 지적대로 세입자의 보호에 대해서 필요성은 있지만 늘 다른 대안이 또 중장기적으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석 의원**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제도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전월세 대책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전월세 하시는 분들 중 상당 부분은 집을 사실 수 있는데 집값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못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전월세 임대에 대한 공급을 늘려 줘야 됩니다, 가격 통제가 아니라. 임대하는 제도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매매 임대를 확보한다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임대에 관한 여러 가지 세제상의 지원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앞서 지금 언급드린 대로 그러한 주택바우처제도를 한다든지 하는 가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석 의원** 부총리님 답변은 틀렸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전월세 대책이 뭐고 하니,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라고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윤석 의원** 드림전세, 행복전세 두 가지를 지금 상품으로 정부가 전세권자들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드림전세는 어떤 것이고 하니 집주인이 본인 집을 담보로 해 가지고 세입자에게 담보대출을 받게 하고 그 이윤은 세입자가 내게 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이것 내놓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알기로는 한 녀 달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석 의원** 4개월요? 몇 가구나 지금 신청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지금 별로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지만……

**○이윤석 의원** 829만 가구가 전월세 대책에 해당이 됩니다. 이 똑똑한 드림전세, 단 한 가구 10월 31일 날 신청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게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그 똑똑한, 그래 그 잘난 행복전세제도 어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집주인이 소위 임차보증금에 대한 것을……

○**이윤석 의원** 그것은 맞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은행이 책임져 주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드림전세는 집주인이 지금 기피하고 있고 두 번째 이 행복전세는 은행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전세, 좋아, 829만 가구 전월세 해당자들 중에 지금 4개월 됐다는데 몇 가구 신청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행복전세는 상당 부분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석 의원** 829만 가구 중에 186건 지금 호응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했네요?

이래서 우리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혹시 민주당이 주장해서 안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는 그런 당론을 떠나서 이것은 좀 객관적으로……

○**이윤석 의원** 정말 제가 수도 없이 지금, 우리 부처하고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국토부장관하고 안 하는데요, 이 제도 정부에서 받아들이세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모든 전세세입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국회 나가서 부동산업자들한테 한번 여쭙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월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당연히 도와 드려야지요. 도와 드리는 방법이 저는 그러한 가격규제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석 의원** 이게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참모들이 덤벼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석 의원** 그렇지 않으면 참 다행이고요.

아무튼 임대주택 잘 아시지요, 행복주택? 그것 20만 호 건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건설하고 있습니까, 5년 내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통계는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석 의원** 전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

○**이윤석 의원** 이 부동산정책이 지금, 65주제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상을 알고 위기의식을 느꼈다면 여러 정책을 받아들였어야 돼요, 저희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좋습니다.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또 정부도 그렇게 인식하고, 또 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 포함을 시키셨듯이 공기업의 부채와 방만 경영 등을 국정의 제일 톱 어젠다로 저희가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윤석 의원** 공기업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부도 걱정이 없고 고통 분담도 없고 염치조차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내용이고 하니 정부에서 다 책임져 주고 구조조정도 없고 방만한 경영을 해도 누구 하나 탓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정부가 책임……

○**이윤석 의원** 인천공항 선례를 한번 봅시다, 공기업이 어떻게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세요, 인천공항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록금 무이자 대출, 대학생 장학금 100만 원, 300만 원 무상지급, 무슨 1인당…… 한번 보세요, 저것. 출산장려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00만 원 까지 지원하고, 불임시술 이렇게 하고, 부모가 입원했을 때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저희가 저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윤석 의원** 시급은 얼마입니까? 일반인들 시급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시간당 임금 말씀하시나요?

○**이윤석 의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윤석 의원** 시급이 일반 국민은 5120원인데요, 비상임이사들은 시급이 최소 칠팔십 만 원입

니다.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바로 그러한 불합리한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말 공기업을 혁신의 차원에서 저희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석 의원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한국감정원은 69년부터 45년 동안 자체 승진이 감정원에 한 명도 없어요, 도로공사는 44년 동안.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석 의원 들어가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고맙습니다.

○이윤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해야 합니다. 한 비자에 보면 ‘구맹주산(狗猛酒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술을 잘 빚는 주막도 문 앞에 사나운 개가 지키고 있다면 손님이 오지 못해 술이 쉬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주인은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개가 손님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고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경제활성화를 비롯한 모든 정책은 결국 대통령의 인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아름다운 옷을 휘날리며 세계를 누비는 패션 외교를 하는 동안에도 국민들의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국민과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이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거제 출신의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거제시 출신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의 대정부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미국 양적완화 출구전략 소식에 당장 우리 주식시장이 대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

리 내부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이 줄줄이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해외요인은 우리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서 민생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자리는 과연 어디에서 더 만들어 가야 할지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라도 국정에 협조하는 통 큰 야당, 우리 야당 의원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표 의원 지난달 민관합동워킹그룹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을 했는데 주요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아직 깊이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분야라서 제가 깊이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제안 내용의 핵심은 아마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의 직접적인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돼서요.

○김한표 의원 그러면 미래부장관님 나오실래요.

지금 부총리님 답변이 좀 곤란하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산업부장관이……

○김한표 의원 산업부장관 나오실래요.

부총리님 들어가시고요.

장관님, 일본 후쿠시마 사태를 통해서 국민과 정부가 원전에 대한 불신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지금 워킹그룹에서 35년도 추정 운전 비중을 22~29%라고 한 것은 경제성과 함께 안전성도 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비중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자급을 할 수 있는 값싼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안전성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성도 고려된 사항입니다.

○김한표 의원 한국수력원자력의 짝퉁 부품 사용 및 부정과 부패 만연의 비리가 결국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그렇습니다.

○**김한표 의원** 방사능폐기물 처리 또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 여전히 사회적 갈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우라늄 핵발전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3세대 원전이 지금까지 사고 한 번 없이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4세대 원전에 대해서 우라늄을 쓰지 않는 원전 개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알겠습니다.

장관님은 제가 상임위에서 많이 뵈었기 때문에, 부총리님 조금 학습하는 의미에서 나와 주시지요.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좀 생소한 내용이 들어 있더라도 잘 이해하시고, 또 총리님께서 잘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원전 건설을 시작해서 현재 가동 중인 대다수 원전은 제2세대에 해당합니다. 이 원전들은 경제성이 있는 반면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잘 경청하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현재 전 세계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제3세대 혹은 제3.5세대 원전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원전 건설 선진국들은 이제 제4세대 원전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앞에 보이는 화면을 많이 참조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보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우리나라 제4세대 원전 연구개발 현황, 물론 잘 모르고 계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우리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선정한 표준 4세대 원자로 후보 6개 중의 하나인 소듐냉각고속로를 주력 원자로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차세대 원자로로 초고온가스로, 일체형 원자로도 함께 개발 중입니다.

혹시 부총리님, 토륨이라는 것 한번 들어 보셨

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토륨, 좀 생소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연구하기 전까지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원전개발 초창기인 냉전시대 때 과학자들은 원전발전 원료로 우라늄과 토륨을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토륨은 불도 잘 붙지 않고 잘 꺼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핵폭탄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우라늄을 선택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지요, 그 당시?

우라늄 원전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서 최근에는 핵폭탄을 만들 수 없고 우라늄보다도 안전한 토륨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토륨과 우라늄의 새옹지마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잘 쫓아가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그러면 안전하고 풍부한 대체에너지인 토륨 핵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토륨과 우라늄의 새옹지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양 물질을 비교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우라늄은 1130도에서 용해되지만 토륨은 3300도에서 용해되고 융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 녹지 않는다 그 말씀이지요. 우라늄은 중단시키지 않으면 계속 타 버립니다. 하지만 토륨은 내버려두면 꺼져 버립니다, 자동으로.

둘째, 핵무기의 확산입니다.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지만 토륨은 핵무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놓고 현재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 등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그렇습니다.

○**김한표 의원** 저와 함께 공부를 또 좀 같이 하십시오.

세 번째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입니다. 우라늄은 상당량의 방사능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토륨은 폐기물 발생량 부피가 우라늄의 100분의 1, 반감

기는 우라늄의 10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 요인이 없습니다.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자원의 분포입니다. 우라늄은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지만 토륨은 바닷가의 모래나 불에 타고 남은 재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아주 흔하게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다섯 번째, 도심지 및 소규모 건설이 가능합니다. 많은 양의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라늄 발전소는 보통 해안가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그래서 전기를 일으키면 상당히 먼 거리에 송전해야 되는 장거리 송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토륨은 대도시나 도심지 인근에 소규모 지역발전이 가능해서 밀양과 같은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바닷가에 세워진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같은 것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저렴한 건설비용과 기회비용입니다. 토륨은 우라늄 핵발전소에 비해 7분의 1 비용으로 건설이 가능하고 송전선 및 방폐장 건설비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온실가스 배출 관련입니다. 토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석탄발전의 30분의 1, 천연가스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토륨의 대체효과입니다. 연간 1GW의 전기 생산에 석탄은 무려 350만 t, 우라늄은 200t, 그렇지만 토륨은 1t이면 가능합니다.

우라늄을 토륨으로 대체한다면 핵무기 제조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핵폐기물의 위험이 없고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는 토륨을 제4세대 원전의 원료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는 문외한입니다만 지금 설명을 들었고 또 검토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부총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현재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와대 국정감사를 통해서 살펴

봐도 역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우라늄 핵원자력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골 아파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는 현재 고속로를 이용한 제4세대 원전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 어떻게 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지금은 소듐냉각고속로하고 초고온가스로를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고속로를 이용한 제4세대 원전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2008년 12월 달에 세계 여섯 가지 4세대 방식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맞다고 판단하는 바를 원자력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연구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본 의원은 원자력 정책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그러나 소듐냉각고속로를 유일한 대안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50년 동안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을 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폭발 및 누출 등의 사고 때문에 폐쇄와 재가동을 반복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바로 소듐이 지닌 불안정성, 즉 소듐이 물과 접촉하게 되면 폭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많은 과학자들이 소듐냉각고속로로 개발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는 아예 소듐하고 물하고 원천적으로 접촉을 차단하도록 이중화해서 지금



안전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이러한 이유로 원전 선진국들은 토륨 등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원자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전 선진국들의 토륨에 대한 연구 현황 알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예, 지금 미국·중국·인도 3개국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벨기에가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과학자 1000여 명이 투입되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인도는 5년 후에 시험 발전이 가능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3세대 원자로에 토륨을 넣는 실험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벨기에는 유럽연합과 실험용 토륨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일본은 과거 중단했던 연구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소듐냉각고속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거고, 세계 미국·일본·프랑스·러시아·EU·중국 이렇게 7개 국가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좋은 지금……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이 함께 공동개발하는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현재 미국은 중국하고 노르웨이, 그다음에 일본은 유럽연합과, 벨기에는 유럽의 많은 국가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정보와 연구를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예.

○**김한표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총리님 다시 좀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본 의원의 질의자료 못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답하기가 좋으셨을 텐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못 받았습니다.

○**김한표 의원** 그러셨군요. 총리님과 다른 장관님들만 들어갔군요.

중국·벨기에·인도 등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문하셨거나 방문 예정인 국가는 주로 토륨

원전 개발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들 국가들과 제4세대 원자로 개발에 대한 다양하고 긴밀한 협력은 국익 신장과 원전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총리님께서 본 의원의 지적을 유념하시고, 폭넓은 과학기술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다음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어떻게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우리나라의 산업의 구조로 볼 때 조선 내지는 해양산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난 8월 달에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 바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금융이라든지 또는 수주 활성화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금년 3분기까지 해양플랜트 수주 실적이 462억 불이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아직 제가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한표 의원** 그러시군요.

462억 불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혹시 가늠하는 생각이라도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여러 가지 시장성이라든지 또는 금융 면에서의 지원 이런 게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우리나라의 조선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해양플랜트 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라든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기자재 분야는 경쟁력이 매우 낮아 가지고 결국 하드웨어 정도만 우리가 만들고 내부의 돈 되는 것은 다 외국기업에 뺏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알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지난 18일 정부가 해양플랜트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셨는데, 주 내용 아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때 저희가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 지은 바에 의하면 크게 두 파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민간금융의 참여를 좀 활성화해 가지고, 또 공적 기관의 지원 역량을 보완하자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사모펀드 같은 그러한 전반적인 금융에 있어서의 지원 그리고 또 규제완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지금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은 어느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산업부하고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각 부에서 하다 보면 이게 협업이 잘 되지 않고, 열심히들 하시겠지만 또 서로 '갈 지'자 행보를 한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산업부, 어떤 데는 해양수산부, 어떤 데는 또 다른 기획재정부 다니면서 행사하기 바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통합하는 컨트롤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저희도 그런 면에 유의해서, 특히 이번 수주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협업을 강조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해운거래소 설립, 금융시스템 지원 강화, 이런 내용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김한표 의원** 해운거래소 설립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해운거래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부총리님을 상대로 해서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하니깐 꽤 힘이 많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경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다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해운보증기금 설치 부분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지난번에 논의된 바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보증기금을

따로 설치하느냐, 아니면 현재의 금융기관에서 그런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독일·덴마크 등은 선박금융 전문기관, 그다음에 중국은 국가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선박금융을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저런 변명 때문에 아주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지막 우수인력 조기 양성이 필요한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토론회를 지역에서 열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할 것 없이 인력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정부에서는 1년에 한 10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기업 하나만 하더라도 한 1000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력 수급 문제를 잘못 짚고 있다 이런 지적이 현장에서 많았습니다.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수주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처뿐만 아니라 무역보험공사라든지 또는 정책금융공사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데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전후방산업의 연관효과, 기술적 파급효과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기술인력, 기능인력 등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고용 창출형 산업입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우리나라 주력 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신속한 정책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런 취지에서 저희도 그런 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앞으로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오늘 제가 신성장 동력인 조선·해양플랜트산업 또 우리의 새로운 영역인 토륨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총리님, 한 말씀 하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토륨 분야는 사실 제가 좀 알지 못하는 분야였는데 의원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단지 듣기로는 토륨 분야가 경제성이 낮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

는 그 점과 또 안전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폭탄도 만들고 핵발전소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까지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 국가적 비용에 비하면 훨씬 더 싸고 저렴하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한표 의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한표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인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 새로운 영역인 토륨 연구를 하는 것이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구현의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큰 격려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통 큰 정치 계속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김한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홍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학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홍종학입니다.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답답합니다.

당파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어느 술자리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도대체 새누리당에는 의인 한 분이 없느냐’ 이렇게 묻더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은 그리고 역사는 합리적이고 의로운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정말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생

각하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제목처럼 한번 외쳐 보고 싶습니다. ‘응답하라, 보수의 양심이여!’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제 분야 본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참 답답합니다. 총리께서도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대선이 끝난 지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홍종학 의원** 지금 국정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참 안타깝습니다.

○**홍종학 의원**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총리께서?

○**국무총리 정홍원** 빨리 해소될 수 있는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 계속 ‘지금 수사 과정이니까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총리께서 하실 말씀이십니까?

지금 120만 건이 새로 나왔는데 이 수사 끝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추가로 그런 게 발견되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홍종학 의원** 그러니까 지금 120만 건 나와서 또 이제 시작하고 이 수사, 이 재판이 끝나겠느냐고요.

○**국무총리 정홍원** 또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결 지어서 남아 있던 부분이 지금 추가로 나온 것이고, 지금 대부분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고, 또 일부 사이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을 믿어 주시고, 그리고 또 숨길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홍종학 의원** 철저히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이 재판이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와서 다음번에 1200만 건 댓글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또 기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년 내내 이 재판만 하다 끝나실 겁

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어떻게 갈지 예단은 안 되지만 아마 그동안에 남아 있던 그것을 가지고 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느냐 싶고, 그렇게 많은 것이 계속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홍종학 의원** 국정이 이 정도 마비가 되었다면 내각 총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글썸, 그건 뭐……

○**홍종학 의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각이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걸 지금 ‘수사 과정만 지켜보겠다’ 이 이야기로 넘어가실 수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대부분의 사안이 지금 수사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시 그것을 특검에서 수사를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홍종학 의원** 계속 지금 법무부에서 막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신문도 안 보십니까, 총리께서는?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막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홍종학 의원** 내각 총사퇴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계속 국정을 이렇게 마비 상태로 놔두실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진 않습니다.

○**홍종학 의원** 책임을 전혀 못 느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것을 어떻게든 풀어 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홍종학 의원** 무슨 노력을 하세요? ‘수사 과정을 지켜보자’ 그 말씀 하시는 노력밖에 더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특검으로 가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원하시는 게 그건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종학 의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만 하더라도 저는 내각 총사퇴 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 저희가 지금 ‘이 댓글이 선거에 영향을 줬느냐?’ 이런 것 묻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도움받았나?’ 이런 것 묻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났으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고, 그러면 국무총리가 알아서 빨리 척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기소를 했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종학 의원** 그런데 그게 계속 지금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한꺼번에 못하고 계속 억제하고 있고……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니까 수사 내용의 일부인데 대부분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추가로 드러난 사실에 기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하자고 하면 법원은 어떻게 되며 사법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종학 의원** 그런 자세 때문에 이게 계속 질질 끌리고 대통령께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게 법리적으로 맞고 사리에 맞다면 제가 진작 건의도 드리고 제가 주장을 했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내각 총사퇴하시라고요.

○**국무총리 정홍원** 글썸, 능력 문제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사리와 법리적인 문제를 깊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야당 파괴 공작이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야당 파괴 공작을 어디서 했다는 겁니까?

○**홍종학 의원** 국정원에서 댓글을 자기가 야당 지지자인데 야당이 저와 다른 쪽이 나쁜 놈이다, 또 내가 저쪽 지지자인데 이쪽이 나쁘다 이렇게 해서 야당 파괴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홍종학 의원** 모르시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다 수사를 해 왔고, 만약 그게 범죄의 혐의와 연결된다면 검찰에서 수사를 했을 것입니다.

○**홍종학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

로 야당 파괴 공작이 있었다면 그것은 범죄행위가 되겠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마당에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홍종학 의원 단정할 수 없으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혐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홍종학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국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미루어 봐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친재벌 정책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져도 실질임금이 늘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명박정부 5년간 실질임금은 연평균 0.2%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성장을 하더라도 임금은 안 늘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만족할 수준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홍종학 의원 그러면 금년도 실질임금 증가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네요.

○홍종학 의원 금년도 8월까지 1.1% 올랐습니다. 지금 경제성장률 2.7% 예상하고 있는데 실질임금은 지금 8월 달까지, 3분의 2가 지났는데 1%밖에 안 됩니다.

임금이 이렇게 오르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서민들의 소득은 형편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1800만 명의 자료를 봤더니 943만 명이 한 달에 140만 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40만 원 가지고 요즘 한 가족이 생활이 가능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종학 의원 그런데 우리 국민 절반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 믿을 수 있으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일자리 확충과 또 복지제도의 확충, 여러 가지 방안으로 도움이 되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삼성과 현대·기아차 세 기업이 전체 당기순이익의 28.6%를 가져갑니다. 이런 나라가 전세계에 한국 말고 또 있을까요? 이거 조사해서 다른 나라 어떤 나라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는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 완화되고 있다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작년의 경우에 삼성전자와 현대차·기아차를 제외시켜 놓고 나면 46만 개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20% 줄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격차가 완화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두 회사만 돈 벌고 나머지는 지금 돈 버는 게 다 줄어 들고 있어요. 그거 모르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 구체적인……

○홍종학 의원 국무회의에서 이런 거 보고 안 받으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 자리에서 논의할 건 아니고 이걸 경제부처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홍종학 의원 그러면 총리는 경제에는 관계도 안 하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경제……

○홍종학 의원 그러면 국정원 사건은 수사에 맡겨 두고 경제는 경제부처에다 맡겨 두고, 총리는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경제부처 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하지만 경제 정책이나 경제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부총리가 할 성질입니다.

○홍종학 의원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특정 재벌들, 몇 개의 재벌들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 재벌들에 대해서 비과세·감면을 58.5%를 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으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까 부총리가 설명을 드린 것에 의한다면 무슨 재벌만을 위한 감세를 하거나 혜택을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홍종학 의원** 아니, 재벌…… 0.3%에 불과한 기업이 58.5%의 비과세·감면을 받아 갑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비율에 따라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수치적으로는 많을 수 있지만 비율상에 있어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종학 의원** 45%밖에 법인세도 안 내요. 그런데 58%를 가져갑니다, 5조 4000억 원을. 전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재부장관께서 그냥 그렇게 보고하니까 ‘잘 됐구나’ 이렇게 지금 넘어가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경제부처에서 총괄해서 정책을 설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가 그렇게 경제 문제에 이것저것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회부총리 하세요, 사회부총리, 국무총리 하지 마시고,」 하는 의원 있음)

(「부총리가 답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홍종학 의원** 내각 총사퇴는 아니더라도 총리는 그만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국무총리 정홍원**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를 전담하라고 부총리를 두었기 때문에 부총리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학 의원** 총리님, 저는 기재부장관께서 너무 재벌 편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께서 상식 수준에서 기재부장관의 정책이 재벌 편향적인지 아닌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거 괜찮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개인적으로 재벌 편향적인 사고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종학 의원** 그러면 제가 증거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재벌총수들을 두 번을 만나셨어요, 당선자 시절에도 만났고요.

그런데 지금 서민들, 지금 심지어는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버리는 대리점주, 가맹점주, 우리 노동자들, 대통령께서 만나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뭐, 필요하다면 만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종학 의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동료들이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서민들의 목소리

인데 이 서민들의 목소리 대통령께 들려 드릴 용의는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필요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기재부장관께서는요…… 아까도 질문에 세무조사 굉장히 세다 이런 얘기, 질문 나왔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홍종학 의원** 박상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장관께서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을 대동하고 전경련 관계자들을 만나서 좀 기업의 편의를 봐주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이것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정확한 발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편의를 봐주겠다고 얘기를 할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종학 의원** 기재부장관이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을 대동하고 전경련 관계자를 만날 일이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 정홍원** 경제활성화를 요청하는 자리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종학 의원**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할 일이 뭘까요? 세무조사를 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도 재벌 편향적이 아닙니까?

자, 정부에서 15대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내놨습니다. 그중에 9개가 전경련이 원하는 법안인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전경련이 9개를 원하는 것을 지금 정부가 전경련을 대리해서 이것을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월 14일 전경련 회장단에서 이거 9개를 꼭 해 달라, 그게 어떻게 경제활성화 법안입니까, 재벌 지원 법안이지? 이래도 재벌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재벌을 도와주기 위해서 법을 내겠습니까. 전체적인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게 기업에서도 원하는 경우가 합치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재벌을 어떻게 도와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입법부에다가 입법을 요청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홍종학 의원** 그러면 이 경제활성화법 15개 중에서 서민을 위한 법안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서민을 위한 법은 경제민주화 관련법도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 무슨 경제민주화 법안이 있으세요. 지금 총리께서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동안에 하도급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홍종학 의원** 아니요, 이 15개 법안요. 지금 내놓은 경제활성화 15개 법안 모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것은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에 도움을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기식 의원 의석에서 — 총리께서 답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고 답하셨어요?)

○**홍종학 의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네요. 모르시고, 지금 국회에다가 내놓고 이 법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전경련이 원하는, 전경련의 소원 수리를 해 주는 법안이에요, 이게. 그것도 파악을 못하시고 그냥 기재부장관이 냈으니까 이것 경제활성화 법안이겠거니 이라고 국회에다 요청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경제 부분은 경제부총리가 있기 때문에, 부총리를 두는 이유가 그런 것을 총괄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종학 의원** 좋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저도 돌봐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홍종학 의원** 지금요 우리 기재부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기재부가 재벌하고 함께 조세정책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작년도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저것 좀 한번 봐 주세요. 기획재정부에서 발주한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인데요. 누가 했냐 하면요 이것을, 그다음 것 보여 주세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사회통합센터소장이 여기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벌이 원하는 세법을, 조원동 지금 현재 경제수석이지 않아요. 국책연구 기관장이 재벌이 원하는 조세법을 받아서 그걸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거기에 있는 법안들을 지금 정부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득세를 올리지 않겠다, 법인세는 인상은 물론 안 할 것이고 2단계 세율체계를 1단계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이게 기재부장관께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당장은 아니지만 고려해 보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것이 재벌이 원하는 세제개편 방향입니다.

그런데 재벌의 세제개편 방향과 우리 서민들의 세제개편 방향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재벌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저렇게 보고서를 받아서, 지금 그것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보고서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정부 정책하고 합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채용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 제가 한번 그런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에 관련해서는 경제정책을 다루고 있는 경제 수장에게 물어 주셔야 더 정확한 답도 드리고……

○**홍종학 의원** 대통령께서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는 게 소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도 얘기를 하시는데 총리께서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는 것이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 자, 재벌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라는 것이 바로 그 돈 많이 버는 일부 재벌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거 올리게 되면 재벌들이 부담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재정이 적자 상태 아닙니까? 엄청난 재정 적자 나고 있지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민 쥐어짜야 되겠지요.

이번에 8·8 세제개편안에서 증산층 몇 명한테 세금을 올린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알고 있는 경제정책은 증세는 억제하고 가능한 한 조세감면 제도라든지 양성화하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증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증세가 경제의 활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부는 유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홍종학 의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유리지갑 봉급쟁이들 434만 명의 세금을 올리고, 고물상 그 폐지를 줍는 우리 어르신들 175만 명의 세금을 올리고, 식당 하시는 분들 식당이 안 돼서 지금 폐업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67만 명의 세금을 올리는 것이, 그것이 박근혜정부의 서민

정책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폐지 줍는 사람에게 부담은 안 가도록 그걸 관리하는 기업에서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축산물, 식당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논란이 되다가 배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 그러니까요. 법인세는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면서, 재벌들에게는 조금도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여기는 400만 명이 세금을 올린다고 아우성치니까 그러면 ‘200만 명 봐줄게’, 우리 어르신들 60만 명, 백몇 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봐줄게. 50만 명만 세금 내’, 식당 몇십만 명이니까 ‘그래, 봐줄게’ 이게 타당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저는 경제에 대해서 밝지를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지금은 논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다만 기업의 법인세 문제는 같은 세율에 의하더라도 기업의 수익이,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종학 의원** 우리 국민들은 경제 지식이 많을까요? 우리 폐지 줍는 할머니는 경제 지식이 많아서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 정홍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폐지 줍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부담이 안 가도록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식당의 세금 느는 거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거……

○**홍종학 의원** 봉급쟁이들, 월급쟁이들 세금 느는 거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식당 그것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 조정했잖아요. 그래서 좀 줄어서 30만 명 더 세금 부과하잖아요. 재벌들한테 세금을 안 부과하기 위해서 서민 쥐어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무총리 정홍원**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과하시고요.

○**홍종학 의원** 자, 그러면 서민들한테는 이렇게 세금을 내게 하면서 재벌들은 조금도 세율을 올리면 안 됩니까? 거기는 불가침, 정말 신성한 성역이에요?

○**국무총리 정홍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마치 기업이나 그런 데,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데, 제가 경제 파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전연 그런 게 없고, 지난번에 감세 얘기도 많이 나오지마는 그때도 똑같은 비율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쪽에 특혜를, 비율을 갖다가 더 높인 다든지 낮춘다든지 하는 그런 조정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가 좀 늘어나고 그래서 좀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법인세의 인상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그런 업계의 상황……

○**홍종학 의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법인세는 안 되고 재벌은 세금 못 걷고 서민 쥐어짜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서민을 쥐어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홍종학 의원** 아니, 지금 몇 백만 명의 세금을 더 걷는 게 세금을 쥐어짜는 게 아닙니까? 재벌 세금 인상은 대통령께서 “내 소신이다.” 그래서 더 이상 언급도 못 하게 하셨잖아요.

○**국무총리 정홍원** 대기업들이 내는 세금의 크기도 고려를 하시고, 같은 비율에 의해서 하더라도 소득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하게 된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런 유보 자금이 있어야 투자가 되어질 수가 있고 그렇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기업들이 자꾸 세금을 높게 올려서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또 다른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종학 의원** 서민 쥐어짜기의 완결판은 부가가치세 인상이라고 합니다.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부가가치세 인상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에 대해서는 경제 부처에서 좀 연구할 문제입니다.

○**홍종학 의원** 인상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뭐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제 부처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홍종학 의원** 그러니까 박근혜정부 내에서 부



가가치세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부처의 의견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의 입장이 뭐냐고, 총리의 입장이!」 하는 의원 있음)

(「총리 잘하고 계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종학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자, 어느 정도냐면 우리 맥주가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 맥주보다 중소기업 맥주가 세금을 2배나 더 냅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서울이나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홍종학 의원 하여튼 중소기업 맥주가 대기업 맥주보다 2배의 세금을 낸다고 한다면 그거 시정할 용의 있으십니까? 같은 정도, 같은 액수로 세금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기획재정부장관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중소기업도 커서 대기업 되면 세금이 낮아지니까 이걸 차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홍종학 의원 정말 심각합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 잘하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 잘하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노력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돼야지 그럼 일 안 하고 국가에서…… 자선사업입니까, 이게?」 하는 의원 있음)

(「중소기업이 노력 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서민이 노력 안 해요, 서민이? 서민은 놀고먹어서 못살아? 어떻게 말을 그만 식으로 해?」 하는 의원 있음)

(「해도 너무 하잖아!」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박근혜정부의 재벌 편향 정책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재벌의 세금 인상은 성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서민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홍종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용인갑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용인갑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 고착화로 경제의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1%만 하락하면 우리 젊은이들의 약 7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7.9%의 높은 청년실업률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가고,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은 노후 준비 부족으로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일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17조 3000억 규모의 추경예산안까지 편성하였으나 경제성장률은 3.0%를 넘기기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웃 일본은 아베신조 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로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으며, 중국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편,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경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돌려주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난립한 경제규제의 과감한 철폐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경제 분야만큼은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새로운 국가적 성장동력이 창출되도록 해야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저는 오늘 사실 경제 부분에만 질의를 하려고 나왔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국

정원 댓글 사건을 자꾸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박근혜정부가 이제 9개월 남짓 됐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우현 의원 그동안 뭐 지난여름 야당에서 장외투쟁 했고 또 지금 정기국회가 80일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민생 법안을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우현 의원 또 이번에 우리 예산결산 심의도 지금 안 됐고요. 또 지금 감사원장이나 우리 장관 임명 절차도 안 됐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우현 의원 지금 국정에 굉장히 많은 난맥이 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이에 대해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지금 대선이 끝난 지가 거의 한 1년이 됐는데도 계속 발목 잡는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아마 전공련이나 전교조나, 남부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총리님, 공무원은 국정원 공무원하고 검찰 공무원하고 전교조 공무원하고 또 일반 지방자치 공무원들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같습니다.

○이우현 의원 같은데 왜 국정원 댓글 또 국방부 것만 하고, 지금 이 수사를 다 같이, 공직자는 모두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많은 댓글 달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달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부분에는 수사를, 정부가 왜 미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이 되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우현 의원 그러면 이런 댓글 사건은 한 군데에서, 여러 명의 검사와 여러 명의 수사관이 한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수사를 서울지검하고 남부지검하고 따로따로 했습니까?

그것 좀, 총리께서 그런 부분은 강력히 건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수사에 대해서 뭐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해라 하면 그 자체가 또 간섭이 되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는 개입 안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정부는 그런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서 할 문제입니다.

○이우현 의원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더라도, 정부 아닙니까?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1년 내내 지금……

국민들이 지금 뭐 국정원, NLL 이런 것 관심 없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우현 의원 지금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까? 총리님은 그동안 민생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누구 입장……

○이우현 의원 국민들이요, 국민들.

○국무총리 정홍원 국민은 뭐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우현 의원 지금 RO조직 수사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것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우현 의원 기소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우현 의원 지금 우리 수도권 남부에 보면 성남시 용인시 하남시 수원시에 중요한 국가시설 물이 많이 있는 것,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우현 의원 그래서 RO조직이 주로 그 단체에서 활성화가 많이 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뭐 그런 점에 대해서 기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수사인력을 더 대폭 강화해서 중복세력 모두 색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추가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우현 의원 이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총리님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에요, 규제가 결국 일자리를 발목 잡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1만 4999개에 달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이런 규제 속에서 기업투자 하겠습니까? 일자리 창출되겠습니까?

갈수록 규제가 매년 늘어나는데, 정권 바뀔 때마다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경제·사회 구조가 날로 복잡해지고 또 여러 가지 국민 안전 이런 문제가 현안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규제가 생키다 보니까……

○**이우현 의원** 아니, 안전 문제하고 기업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2012년도에 국가경쟁력을 보면 우리나라가 144개국 중에서 19위입니다, 경쟁력이. 그런데 정부 규제 부담은 117위예요.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 기업이나 외국인 기업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기업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 생각은 어떠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것 뭐 옳은 말씀이고, 새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제도를 갖추고 있고, 또 이 규제에 대해서 잘 들어 보셨겠지만 ‘손톱 밑 가시 뽑기’ 등을 비롯해서 그동안 약 335건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기초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수도권 규제를 그동안 많이 했거든요.

물론 전 국민이 잘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 도시도 세종시로 내려갔고 모든 공기업이 이제 1~2년이면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선진국된 도시가, 수도권을 규제해서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수도권의 경기도만 해도 1250만 명이 살고요. 또 영남·호남 또 충청·강원·제주에서 다 와서 사는 겁니다. 경기도민은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다 고향 떠나 와서 수도권에 와 살면 수도권 규제 완화를 풀어 줘야지 이것을 다 묶어 두면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갑니까?

지금 중국이나 인도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이런 데로 가고 신흥국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규제가 많다 보니까……

지방 가면 지금 인력이 안 됩니다. 또 모든 부분에 기업들이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가 파악해서 시기적으로 이제는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갖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도권 규제가 된 것은 수도권의 과밀 현상, 집중 현상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과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가 차츰 해소되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우현 의원** 지금 보면 이 수도권 또 특히 2000만 우리 수도권 시민들이 먹는 식수, 팔당상수원에 대해서 용인을 비롯해서 7개 시군이 너무나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규제가 30년 전에, 이미 많은 1급수 물을 7개 시군 시민들에 이제는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잖아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모든 종말처리장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규제 풀어 줘야 됩니다, 일부는.

그래서 그분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 줘야 되고요. 그것 안 풀어 주려면 수돗물 값 올려서 그 7개 시군 시민들한테 재산권 보호해 줘야 됩니다.

총리 생각은 어떠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서 그 지역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점 알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분치 못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지금 수도권에 보면 50~60년 전의 군 시설이 다 경기도 수도권에 있습니다. 특히 항공부대 같은 게 많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좀 더 정부가 아주 정말 이제는 큰 틀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 갖습니다.

그래서 RO조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인근 아파트 옆에 비행장이 있고 항공부대가 있으면 그것 만약 전쟁이 저기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정부가 넓게 큰 틀에서 좀 더 민간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데 또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과감하게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군 공항 등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제가 지금 보면 우리 정부의 부처 장관관님들이나 또 청와대 수석들이나 보면……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축구

를 하다 보면 골키퍼도 필요하고 수비도 필요하고 공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대 정권들을 보면 CEO 출신들을 많이 입각을 시켰는데 이번 정부에서 CEO가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론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물이 더 중요하거든요. CEO 경험 못 한…… 이론적으로 하는 것? 그렇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라도 청와대만큼은 좀 더 CEO 출신도 많이 들어와서 정말 이 경쟁력을 어떻게 이겨 나갈 것이냐. 우리는 중국이 막 올라오고 있고요, 또 일본이 있고, 또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 안 하고 우리나라 기업도 신흥국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게 그래도 올바른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총리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대통령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총고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한쪽에 옳은 면이 있으면 또 다른 쪽에 반대되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의견도 있고, 참으로 어려운 것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필요에 따라서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조정회의를 자주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처의 의견들이 다 일리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책이 어느 한 생각에서만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의원 이제 보면요 행정에서 근무한 우리 공직자들 또 학계에서 있던 교수님들 또 CEO, 이렇게 3개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작품을 만들어 나갈 때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요.

그런 속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하는 것이지 전혀 CEO 경험이 없는 분들이 다 하는 것은 축구로 말하면 축구 '축'자도 모르는 사람이 감독하는 것이랑 똑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우리나라 체계가 보면요 감사가

너무 많습니다. 감사원이 있고요, 또 각 부처 감사가 있고 또 각 광역시 감사가 있고, 지방자치 감사가 있고,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지방자치 공직자들이 우유부단합니다. 감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구시대적인 행정입니다.

이제 그런 데 좀 과감하게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직자들 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한 건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하고 각 부처가 하고 도가 하고 이리다 보면 공무원들이 일손 놓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으면 그 감사 자료를 검찰이 됐든 각 부처가 됐든 갖다가 보면, 거기서 보충적인 것만 감사하는 제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행정력,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들어가시지요.

부총리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양도세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 많은 말씀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그렇습니다.

○이우현 의원 정부가 추진하고 하려 해도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안 돼서 추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하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우현 의원 그런데 우리 부총리님 보면, 지금 국민들의 생각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꼭 주택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건설 주택경기가 활성화 안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모든 토지가 지금 양도세가 너무 많아 가지고 거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이렇게 특히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세금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우현 의원 세금이, 양도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같이 많은 나라가 몇 개 나라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많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많지 않은 것 알면 부총리님, 그런 부분도 이제 과감하게 전 정권에서 못 한 것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양도세를 완화시켜 줘야, 또 부모들이 농지라도 하나 팔아야 집도 사주고 학자금도 대고 이런데 왜 꼭 주택난만 가지고 그렇게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택만 가지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특히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은 경기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주택이 활성화되면 주택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라든지 하다못해 이삿짐센터나 여러 가지 연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경기활성화의 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요.

이제 모든 다른 부동산도 완화시키고, 또 옛날에는 대기업들이 토지도 많이 구입했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대기업도 좀 그런 것을 완화시켜 줘서 옛날에 비업무용 땅으로 해서 다 지금 강제매각시켰잖아요. 그때는 그때의 정책에 필요했던 거고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 어려운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지금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하는 것을 완화하는 것을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앞으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부총리께서 과감한 부동산 정책 펼치셔 가지고요, 민생경제…… 자영업자,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것 아파트 하나 가지고 맨날 전세·월세…… 모든 게 돌아가야 되는 거지 어느 한구석만 돌아가면 안 돼요. 이게 신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암 걸려 있는데 맨날 약만 줘 가지고 그 암이 낫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부총리께서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알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와 여당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불황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들딸들이 많은 지식과 스펙을 가지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500 대 1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초기 암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정원, NLL 관심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민의 경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에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병석** 이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김재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연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재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의 첫 번째 대정부질문입니다. 건강하고 힘찬 모습, 청년의원다운 패기 넘치는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었는데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지난 11월 5일, 박근혜정부의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결정한 이후 진보당 의원들은 삭발·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오늘로 16일째가 되었습니다. 물과 소금만 먹으면서 여의도의 매서운 강바람을 맞으며 농성을 하다 보니 몸이 많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은 박근혜 정권의 그칠 줄 모르는 진보당 죽이기와 민주주의 말살 행태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 고통이 저에게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단식으로 몸은 힘들지만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최선을 다해 질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신청한 사유 중 주로 경제와 관련한 부분을 저는 오늘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여섯 가지 항목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존재했던 정당들이 표방한 강령 또는 선언문의 일부입니다. 위의 내용 중에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중인 것이고 법무부에서……

○김재연 의원 지금 제가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여섯 가지 내용 중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여쭙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헌법에 위배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었다고 해서 기소가 돼 있는데 그 중에, 그걸 지금 재판하고 있는, 심판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김재연 의원 여섯 가지를 다 보기는 보셨습니까? 제 질문을 이해 못하신 겁니다. 저 중에서 통합진보당 강령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심판과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답변하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법무부의 입장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해서 심판을 청구한 것이고……

○김재연 의원 저 여섯 가지 중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답변하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그것 지금 심판청구 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여기에서 논쟁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김재연 의원 저 여섯 가지는 과거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이번 심판청구와 상관없는 내용들입니다.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답변하시는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자, 농민, 소시민, 양심적인 기업가 및 기술 있는 자의 권익을 도모하며”는 51년 자유당의 기본강령입니다. “노동자와 농민 등 근로대중이 민주국가의 주인이므로”는 51년 자유당

의 행동요강입니다.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진보적 근로인테리, 중소상공업자, 양심적 종교인 등의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적 집결체”라는 말은 56년 진보당의 강령입니다. 민중당은 “민중을 위한 정당이다” 민중당의 합당선언문입니다. “민중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민중의 편에서 쉬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80년 민정당의 발기선언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동자 농민 중소 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정당이며, 그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 나갈 것이다”가 통합진보당의 강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말씀하세요.

○김재연 의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정당해산심판청구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다는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같기 때문에 국가변란 목적 활동 혹은 이적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 내용은 논리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과거 자유당, 진보당, 민중당, 민정당도 모두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이라는 말이 됩니까?

총리님, 답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여기는 헌법재판소 심판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판단할 문제이니깐 장외에서 그런 논란을 하는 것은 현재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김재연 의원 영 영똥한 답변을 하시네요.

저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자유당, 진보당, 민정당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과거 그게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고 그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김재연 의원 할 말이 없으신 거겠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할 말이 없는 것보다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내용을 여기에서 논란을 하자고 하시면 어떻게 그것을……

○김재연 의원 총리님, 똥똥지같은 답변입니다.

저런 황당한 궤변을 만드느라고 두 달 동안 TF를 운영한 것입니까?

다시 여섯 가지 항목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역시 마찬가지로 역대 대한민국 정당들이 표방하는 경제정책들입니다.

총리님 보시고 이 내용들 중에 가장 뚜렷하게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답변하십시오. 보고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그것 참 보기도 힘들다, 사실.

어쨌든 정부의 입장에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해서 심판을 청구를 했고, 또 그 심판 내용은 여러 분야에서, 지금 말씀하신 분야도 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현재에서 판단을 해서 심판을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장외에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연 의원** 총리께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30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이자 수십 년을 법조인으로 살아 왔던 사람에게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이 잘못된 질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했고, 또 그래서 심판을……

○**김재연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저 내용 중에 뭐가 문제냐고 묻는 겁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지금 현재에서 할 것 아닙니까?

○**김재연 의원** 일정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청구서를 접수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에서 그 결론을 판단할 문제인데……

○**김재연 의원** 할 말이 없으시다면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점 경제의 패자들의 억압과 착취를 물리치고”는 51년 자유당의 기본강령입니다. “철도, 통신, 전매사업을 공영제로 바꾸고”는 공화당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사회주의에 입각하여 공정한 분배로써” 55년 민주당의 정강이었습니다. “관료적 특권정치, 자본가적 특권 경제를 쇄신하여” 55년 진보당의 발기취지문이었습니다.

“재벌 통치도 종언을 고하도록 할 것이다” 85년 신한민주당 창당선언문입니다.

마지막,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며 공공성을 강화한다”가 통합진보당의 강령입니다.

다시 정부가 현재에 제출한 정당해산심판청구서를 보시겠습니다.

세 페이지를 연이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넘겨 주십시오.

생산 수단의 소유구조 다원화, 소수 특권 계급의 경제적 특권 불허용, 민중 주체 자립적 경제체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통합진보당이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논리가 없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김재연 의원** 작년 말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에서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렇습니다.

○**김재연 의원** 협동조합은 소유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협동조합 조합원 각자의 참여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연 의원** 사적 소유입니까, 공동 소유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그런 법적인 관계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연 의원**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공동 소유입니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가 흔들립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런 문제도 좀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말씀……

○**김재연 의원** 부총리님,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런

데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검토해 보고 답변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적절한 답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영향이 어떠냐에 대해서 여쭙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향을 분석하고 답변드리는 것이 도리이지 그냥 제가 직관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연 의원 왜 협동조합 기본법 만드셨습니까?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협동조합의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조합원들 간에, 그런 것을 통해서 활동을 하게 하는 취지로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재연 의원 사적 소유의, 시장경제 흔들리게 하는 것이 협동조합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제가 아직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가 흔들린다는 그 표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연 의원 경제부총리께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이해 못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시장경제가 흔들린다는 표현이 저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김재연 의원 그 표현이 부총리께서 참석하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당해산심판청구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사회적기업 등 대안적 소유 지배구조를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주장이 사회주의적 경제질서를 지향하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연 의원 소신 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군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통합진보당 경제 부문 강령 내용의 일부입니다.

부총리님,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출자, 정부가 넓은 의미에서 하는 공공기관은 한 29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연 의원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들

을 민간 자본에 넘기지 않고 국가가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지요, 지금 현재 정부가 그렇게 하듯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소유와 또 그 서비스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김재연 의원 어떻게 다를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를 들자면 어떤 나라는 시내버스를 민간이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시내버스를 공공기관인 지자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연 의원 한국에서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금 공기업을 200여 개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연 의원 정부가 제출한 정당해산심판청구서에는 이런 부분들을 가리켜서 생산 수단의 소유구조 다원화를 추구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협동조합이나 공기업도 모두 소유구조 다원화의 사례들입니다. 이것이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그런 판단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법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경제적인 지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재연 의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알겠습니다.

○김재연 의원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문제, 재산 허위신고,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법인카드나 관용차의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받게 됩니다.

총리님도 이런 과정을 혹독하게 거치면서 총리가 되셨지요.

인사청문회에서 왜 이런 도덕적인 문제를 엄격하게 다룬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그런 엄격한 도덕률이나 그런 면에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연 의원 아직까지 우리 사회 현실이 소수



의 특권층에게 부당한 특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돈 있고 백 있는 소수의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잘못된, 매우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런 행위들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소수 특권계급은 요리조리 법망을 피하면서 편법적으로 특권을 누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특권에 젖어 있는 인물들에게 나랏일을 맡길 수 없기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엄격히 가려내는 것 맞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재연 의원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서에는 소수 특권계급의 경제적 특권 불허용을 추구하는 것이 위헌적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를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른 정당들과 달리 소수 특권계급의 정치경제적 특권들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싸워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수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 특권이란 주권을 비롯한 정치적 권리를, 경제적 특권이란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경제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결국 통합진보당은 소수 상위 계층의 경제적 특권인 사유재산권 등을 제한하거나 박탈하고 그 권리를 ‘일하는 사람’인 민중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총리님, ‘정치적 특권이 주권을 의미하고 경제적 특권이 사유재산권을 의미한다’는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김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시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게 옳은 태도입니다.

○김재연 의원 알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정부에서 청구를 했잖아요, 정부에서. 해산 청구한 당사자 아십니까?)

더 질의할 이유를 못 느끼겠습니다.

소수 특권층의 부당한 특권, 불법적인 특권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이것을 주권을 빼앗는다고 얘기하고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황당한 문서 누가 작성한 겁니까!

누가 결재한 겁니까!

총리께서 관할하지 않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어쨌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헌법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안인데 그것을 장외에서 자꾸 논란을 해서…… 만약 그러면 여기에서 유무죄를, 유무죄가 아니라 해산심판청구의 허용 여부를 가릴 것입니까?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정부에서 청구를 했잖아요. 왜 대답을 못 하는 겁니까?)

(○최재성 의원 의석에서 — 총리의 소신을 말하라는 거예요. 왜 눈치만 봐요?)

○김재연 의원 이 문서는 이쯤 되면 심각한 과대망상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600여 쪽짜리 정당해산심판청구서에는 이런 억지와 궤변, 과대망상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낮 뜨거운 청구서 신청했습니까?

애초부터 진보당 강령과 활동에 위헌적 요소는 없었습니다. 그저 진보당을 죽이기 위해서 없는 내용을 쥐어짜서 만들어 낸 청구서입니다.

정홍원 총리님, 이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청구를 결정한 것 역사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김재연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청구를 했잖아요, 청구를, 정부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을 질문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겠다는 것은 1% 특권세력에게 쏠려 있는 정치권력을 99%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일하는 사람, 민중을 위한 정당임을 당당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맘 흘려 일하는 이 땅의 민중들의 이익을 대변할 것입니다. 소수 특권세력의 부당한 특권에 맞서 비타협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것은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절대로 물려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그게 김일성 주

의인 거야, 그게)

박근혜 정부는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청구를 내어 놓으며 독일 공산당 해산 사례를 꺼내 들었습니다. 1951년에 청구되어 56년에야 최종판결이 내려진 독일 공산당의 해산 사례는 현재 통합진보당의 상황과 여러모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은 통진당 대변하는 거예요, 지금?)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소리에요, 지금?)

(「‘김일성주의’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장우 의원님 사과하십시오.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왜 사과를 해요?)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어제도 말 함부로 하더니 그것을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동료 의원한테?)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은 그러면 그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그것하고 관계 없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대변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통합진보당 두둔하는 것 대변하는 것 아니에요?)

(「의장님 진행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무슨 소리에요, 동료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제발 기본적인 상식만 좀 가집시다!」 하는 의원 있음)

(「대변하지 마세요, 대변!」 하는 의원 있음)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어제는 월북하라고 하더니 오늘은 또 김일성주의냐고 그래요?)

(○이상규 의원 의석에서 — 김일성주의가 됩니까?)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위장된 김일성주의가 그런 거예요.)

(「부의장님, 주의를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상규 의원 의석에서 —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무슨 이런 막말입니까?)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주의 주세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런 막말에 대해서!)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대변인이예요?)

(장내 소란)

○부의장 박병석 잠시……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이런 막말에 대해서 주의 주셔야 됩니다!)

(「시간 됐어요. 진행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단상에서 의원님들이 발언하실 때 의석에서 의원님들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왔습니다마는 항상 의원으로서의 금도와 품격을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김재연 의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김재연 의원 당시 독일 공산당 해산과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일 공산당은 소련식 기본 질서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향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 아테나워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던 이유에 대해서 독일의 재무장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해산심판의 증거와 목록은 회의록과 연설문이 전부였고 심지어 문서가 교묘하게 조작되기도 했습니다. 서독의 현존질서가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극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문을 헌법질서의 전복으로 둔갑시켜서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독일 공산당을 낙인찍어 버렸습니다. 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56년 독일 공산당 해산판결이 내려지자마자 판결 당일에만 2만 5000여 명의 집과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199개의 당 지역위원회 사무실이 폐쇄되었으며 뒤이어 35개 인쇄소와 다수의 출판사·신문사가 폐쇄되고 1만여 명의 당원들은 쫓기거나 연금되었습니다.

탄압은 공산당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200여 개의 민주적 조직의 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었고 68년까지 총 25만 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등 박근혜 정권의 공안몰이 광풍이 겹쳐 떠오르면서 오싷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박근혜 정권의 공안통치·공포정치는 정권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사회에서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낙인찍고 씨를 말려서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철저히 제거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수구세력의 영구집권 시나리오를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매카시즘, 사나운 광풍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략·날조 범죄집단 국정원에 의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 당원들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왜곡됐던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과 구속된 이들의 석방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호소드리면서, 끝으로 이석기 의원이 체포동의안 처리 직후와 재판장에서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짓과 독재가 지금 엄청난 물리적 힘을 갖고 있어 세 보이지만 거짓을 이기는 진실은 없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역사는 없습니다. 국가 권력이 아무리 세도 국민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기지 못합니다.

역사는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비록 잠시 그렇게 보일지라도 역사는 언제나 정의의 편이며 정의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에 의해 실현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부의장 박병석** 김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주영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朱永順 議員**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입니다.

국민 과반수의 지지로 탄생한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불안과 많은 서민과 자영업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동양그룹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대기업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큰 피해를 주고 민심마저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야당은 대통령 흔들기를 넘어 대선 불복의 여론까지 부추기

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고사하고 지난해 결산도 처리 못 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80여 일 동안 법안 한 건 처리도 못 하면서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은 복지부장관 사퇴 여부 흥정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통한 진정한 국민 대통합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홍원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동양그룹 5개사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되면서 동양그룹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5개 법정관리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이 2조 3000억 원, 피해자만 4만 6000명에 달하는 등 지난 99년 대우그룹 사태 이후 최악의 개인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동양그룹은 부채비율이 200%도 안 되는 계열사 두 곳도 기습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 금융당국까지 당혹하게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무엇보다도 해당 기업의 모럴해저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영 행태에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융감독 현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감독체계상의 허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朱永順 議員** 왜 동양그룹이 멸절한 계열사들까지 법정관리라는 극약처방에 포함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朱永順 議員** 금융권 대출과 회사채, CP 등 채무 탕감은 물론 경영권까지 유지할 수 있는 허술한 법정관리제도 때문입니다. 노무현정부 초기 2004년 당시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에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통합도산법을 제출해 200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투자자, 채권단, 특히 중소 하청업체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든 사과가 있습니다.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총리께서도 무슨 제도인지 아실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DIP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朱永順 議員** 그렇습니다. 통합도산법에 도입된 DIP제도, 즉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입니다. 부실기업이 채무 탕감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 기존 경영자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돼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남의 돈 다 떼어먹고 회사는 자기가 갖도록 허락해 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입니다.

총리께서는 2006년 법 시행 이후 법정관리 신청 기업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대략적인 수치를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약 10배 정도 늘어났다고 듣고 있습니다.

○**朱永順 議員** 예, 2006년 76건에 불과하던 법정관리 신청은 지난해 803건으로 불과 7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고, 법정관리 인가 건수도 9건에서 지난해 290건으로 무려 32배나 증가했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은행이나 투자자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법정관리 인가 기업이 1135개에 달하는데 기업당 200개의 하청업체를 가정하면 무려 22만 7000개 하청기업의 채권이 부실화되어 상당수는 도산하는 등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제도 중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에 대한 비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0년 한솔그룹, 2011년 LIG그룹, 금년 초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웅진그룹 사태, 지방의 1130여 개 법정관리 중견기업 사태까지 부도덕하고 악의적인 행태에 수많은 투자자와 하청업체만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방경제는 파탄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7월 동료 의원 51명과 함께 본 의원이 발의한 통합도산법 개정안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들었습니다.

○**朱永順 議員** 법정관리인 선임 시 채권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존 경영인의 법정관리인 선임을 배제하고 법원의 특별감독을 받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부실기업의 일방적 법정관리로 인한 하청 중소기업의 시급한 하도급 대금을 공익채권으로 간주해 흑자 도산을 막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DIP 개선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금융위, 은행권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금감원의 경우 아예 DIP 제도를 폐지하자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朱永順 議員** 총리께서는 이대로 DIP 제도 등 법정관리제도를 방치하여 제2·제3의 동양사태가 발생하게 놔두실 겁니까, 아니면 시급히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의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혹시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검토를 충분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議員**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국토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KTX 건설 문제 도대체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지 아십니까? 87년 대선 당시 노태우가 제안한 이후 26년이 지났고 완전 개통까지는 아직도 4년이 더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합니다. 경부고속철도는 이미 1·2단계 사업을 완료했는데 호남은 30년이 걸려도 완공이 불투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것이 구간별로 봐야 하는데요, 오송-광주 구간은 2014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광주에서 목포까지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처음에는 직선 단선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무안을 경유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朱永順 議員** 지난 참여정부도 조기착공을 공약했지만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경제성이 기준이다. 균형발전이라는 단순논리는 안 된다'라고 미워 버렸을 때 과연 호남의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도 기본계획을 변경했고 대통령께서도 무안공항을 경유한 호남 KTX 건설을 전남의 1번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 어떻습니까? 목포-송정 구간 예산 한 푼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안 경유로 바뀌면서 사전타당성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조사가 끝나고 여러 절차를 밟으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려서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朱永順 議員** 지금 이 구간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렇습니다.

○**朱永順 議員** 2017년 완공을 위해서는 당장 실

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타당성 없으면 공사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또 기본계획을 변경할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 부분은 일단 지금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내년 3월경,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나올 것이니까 그 결과를 보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朱永順 議員** 2017년까지 박근혜 대통령 공약 1번입니다. 전남 공약 1번인데, 금년에 국토부장관께서 반드시 이것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朱永順 議員** 국토부장관이 교수 출신이 와 가지고 상당히 추진력도 있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줄 알았는데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이것 반드시 금년에 1번 공약입니다. 내년에 당장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정부가 호남고속철 완공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안철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2011년 당시 남해안철도 구간 중 경제성을 이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구간은 어디였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3개가 있습니다. 부산-마산, 진주-광양, 보성-임성, 3개 구간입니다.

○**朱永順 議員** 그러면 진주-광양 구간은 B/C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것이 타당성검토를 하던 중에 30대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타당성검토를 하지 않고……

○**朱永順 議員** 누구 선도사업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30대 선도사업, 지난 정권 때 30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朱永順 議員** 이명박 전 대통령 선도사업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렇습니다.

○**朱永順 議員**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선도사업은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2번으로 공약한 남해안 선벨트하고 중요한 남해안 대통령 공약은 이행 안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 부분은 지난 정권 때는 지난 정권 때의 기준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30개를 추린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들은 지속적인, 지속되는 사업들은 완공 위주로 실시를 하고 새로 시행해야 될 사업들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200억 원의 예산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2억 원만 현재 반영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朱永順 議員** 20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1500억 예산이 필요합니다.

당시 똑같이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만 진주-광양은 타당성 재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같은 남해안 철도의 목포-보성 구간만 7년째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러니까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성-임성 사업이 여러 가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선·단선 전철로 계획이 되다가 B/C가 안 나오고 하니까 순수한 단선으로 이것을 바꾸면서 실시계획서 다시 수립하고 이리다 보니까 계획 자체가 바뀌면서, 이게 과거에는 죽 진행되다가 최근 한 6~7년 정도 진행이 안 됐다가 계획이 끝나면서 다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시점에 있고요. 그래서 소액이나마 이번에 20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朱永順 議員** B/C 분석은 진주-광양도 안 나오고 보성-목포도 안 나옵니다. 때문에 진주-광양은 이명박 전 대통령 선도사업으로 돼서 공사를 B/C 분석 없이 하고 호남은 7년째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장관님, 이래도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30대 선도사업을 선정한 것은 전 정부에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고요.

지금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획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朱永順 議員** 최초 목포-보성 구간의 B/C는 0.61이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삼척 구간 B/C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잘 모르겠습니다. 한 영점육 얼마쯤 될 것 같습니다.

○**朱永順 議員** 모르지요?

0.62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포항-삼척은 국토부가 821억 원을 요청했는데 기재부가 오히려 1103억 원을 증액해서 19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목포-보성 구간 예산 얼마입니까? 2억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朱永順 議員 2억으로 무슨 철도 건설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러니까 전남인들이 호남 소외라고 아우성인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래서 지금 저희도 신청한 것에 비해서 2억밖에 반영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朱永順 議員 장관님, 옛 속담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입이 열하나네요, 할 말이 있으니까.

남해안 철도는 전남 2번 공약입니다. 막혀 있는 목포와 부산을 2시간대로 잇는 남해안 철도 연결이 전국의 어떠한 SOC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남해안 시대를 활짝 열어 국제화로 가는 대표적 사업이 돼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 1500억은 국토부장관께서 반드시 신경 써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금융위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 금융기관들이 대거 퇴출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금융서비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반은행 점포의 무려 6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금은행의 수도권 퇴출 비중이 높지요. 어느 정도입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지금 인구 대비에 비해서 한 6 대 4 정도로 수도권 비율이 좀 높습니다.

○朱永順 議員 약 68.3%입니다.

현재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두 곳의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지요?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議員 언제쯤 결정됩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지금 예비입찰을 받았고요. 저희가 본입찰 결정을 아마 올해 말이나 내

년 초쯤에 결정할 것 같습니다.

○朱永順 議員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3대 원칙이 됩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나온 3대 원칙은 빠른 민영화,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금융산업의 발전, 이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朱永順 議員 조기 민영화는 공통의 문제일 것이고,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문제의 경우 어떻습니까? 광주은행 공적자금 회수율이 84.2%……

○금융위원장 신제윤 예. 경남은행도 한 90% 정도 되고요.

○朱永順 議員 경남은행은 94.5%에 달합니다.

광주은행의 경우 외환위기 때 지역상공인과 지역민들은 2500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무려 4379억 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고도 광주은행의 지역 환원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지금까지 참아 왔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우량한 광주은행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은행·경남은행 지역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손실을 보시고 그 지역 은행으로서의 발전, 지금 굉장히 우량한 은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헌신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朱永順 議員 그렇다면 지역 정서에 부합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은행을 육성하는 주장을 단순한 정치 논리로 보십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정치 논리라기보다는요, 지역민을 위한 은행, 그러니까 지역민의 소유만이 반드시 지역민을 위한 은행이냐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누가 주인이 되든 저희는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 매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겁니다.

○朱永順 議員 금융산업 발전으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양 지역민의 품으로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금융위원장 신제윤 저는 지역민의 소유보다는 지역을 위한 은행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朱永順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공공입찰 제한제도는 담합 등 부정 당업자에 대해 최대 2년까지 공공기관 입찰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議員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수백개의 건설현장 중 어느 한 곳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기업 전체의 영업을 정지되는 효력이 발생하는데 하청업체 등 지역 중소기업체들도 생존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입찰제한조치를 받은 업체 대부분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하는데 최근 4대강 담합에서도 보듯이 법원에서는 가처분신청을 대부분 인용합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공공입찰제한제도는 실효성도 떨어지고 소송을 대행하는 대형 로펌의 배만 불러 주고 있습니다.

입찰제한조치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줄어들고 있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주영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부정한 그런 부정당업자에 대해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입찰자격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朱永順 議員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엄격히 근절하고 강력한 처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효성도 없고 영업정지와 다름없는 실적 위주의 현행 공공입찰제한제도는 국가경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징금이나 벌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향 조정하거나 제재사유를 세분화하여 입찰제한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프랑스와 같이 법원 판결로 입찰제한조치를 시행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바로 그런 취지에서 정부도 금년에 국가계약법을 개정해서 입찰참가 제한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朱永順 議員 시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도전과 용기로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민경제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민생 문제에 머리를 맞댁시다.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국민 대통합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논쟁을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주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순번입니다.

경기 안산 단원울의 민주당 부좌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안산시 단원을 민주당 부좌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 경제는 국내적 경기불황의 확산과 세계 경제위기 상황이 겹치면서 구조적인 불황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개별 산업 차원에서도 건설업과 조선업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불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급격한 수익성 악화로 파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정부가 과연 그 문제점을 인식은 하고 있는 것인지, 대책 마련은커녕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걱정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산업정책만이 아닌 듯합니다. 재벌들의 금고가 점점 불어날 때 국민들의 가계부는 소득보다 빚이 가파르게 증가해 가계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영업자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양극화의 늪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한국 사회의 심각성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내놓으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질문에 앞서서 총리님, 국정원 정치개입 트위터 글이 120만여 건에 이른다는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정말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태가 또 어디로 발전할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시급히 타개하기 위해서 총리께서도 현재 이 정쟁 상태를 시급히 마무리하는 것을 바라고 계시겠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부좌현 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이 사태를 빨리 특검에 맡겨 깨끗이 털고 가자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주장인데, 지금 총리께서는 그동안 답변을 보면 ‘이 관련 내용이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특검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시종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부좌현 의원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말이지요, 재판 중인 사건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재판 중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미진한 부분하고 전혀 수사되지 않는 부분 또 부실 수사가 예상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 합리적 주장인데, 우리 시급한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서라도 총리께서 대통령께 특검 수용을 건의해 주시고, 그래야만 내각총리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의혹 제기된 대부분이 기소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도 수사 진행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마당에 다시 또 특검을 하자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 같으면……

○부좌현 의원 아니, 수사 중이 아닌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깊게 생각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평소에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서 관련 부처들로부터 지속적인 보고를 받는 등으로 우리 경제현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 파악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뭐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경제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좌현 의원 작금의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핵심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세계 경제의 흐름이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신흥국은 아직도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에는 2분기 연속 1%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서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어떤 결과가 올지 우려도 있습니다.

○부좌현 의원 총리, LIG건설·웅진·STX그룹·동양그룹이 잇따라 파산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부좌현 의원 이들 기업의 파산으로 우리 경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총리는 파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동안의 국내 경기상황도 좀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또 경영 부실이라든지 자금 사정 악화 그리고 감독에 대한, 금융 감독의 허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좌현 의원 한국은행 보고서는 최근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상장 기업의 채무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단기 지급 여력이 떨어지는 등 기업의 전반적인 채무건전성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조선, 건설·부동산, 해운 등 취약업종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계, 자동차, 철강 업종의 경우에도 수출 여건 악화 등으로 수익성이 하락하였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우리 경제의 현실을 비슷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개 업종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꺼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부좌현 의원 아파트만이 아니라 상업용 건물과 도로 등 인프라도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토목 건설 수주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만이 아닙니다. 중동지역의 건설 수주도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내란과 정치적 혼란의 장기화 등으로 사실상 막힌 상태입니다.

총리, 기업의 부채비율 200% 기준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가이드라인 맞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좌현 의원 현재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기



업 계열 건설사들 중에 부채비율 200%를 넘는 회사들이 즐비합니다. 심지어는 계열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무리한 증자 때문에 그룹 자체가 휘청거리는 대기업 그룹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심각한 위기 상황 개선대책으로 부실업체에 대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총리, 부채비율 200%를 훌쩍 넘어서 3, 40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 모두에 대해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지금 관계부처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좌현 의원 또 한계에 다다른 시멘트산업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무총리 정홍원 시멘트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한 시멘트 규격 조정 등 시멘트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좌현 의원 2012년 국내 시멘트 총생산량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데요?

○국무총리 정홍원 육천……

○부좌현 의원 미세한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4400만이 채 안 됩니다. 1993년 이후 가장 적은 생산량입니다. 동양시멘트그룹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유가 바로 시멘트산업의 불황 때문입니다. 동양시멘트만이 아닙니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회사는 물론이고 1000%를 넘는 회사도 있습니다. 시멘트산업 자체가 불황의 늪에 깊이 빠져 있는데 산업부는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 및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런 상황 방치하는 정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점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

○부좌현 의원 조선업과 해운업 상황도 한번 보십시오.

앞서 STX그룹의 파산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마는 STX그룹의 파산은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적인 경기침체, 해상 물동량 격감 그리고 선박 수주량 격감이 주된 원인입니다.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 잔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비해서 2012년에는 각각 800여

척과 약 6000만t으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상장 대형 조선사들 중 부채비율이 300%가 넘는 회사가 있으며 당기순이익이 2010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거나 또는 적자로 접어든 회사들이 즐비합니다.

해운업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요 해운회사들은 2011년 이후 모두 적자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해운회사들의 수입이 2008년에 비해 2012년에는 그 3분의 1이 줄어든 약 350억 달러입니다. 부채비율이 7, 800%에서 1000%가 넘는 회사도 있습니다. 2009년 이후 해상 물동량보다 선복량이 25% 이상 과잉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 상황은 201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조선과 해운업계의 거의 대부분이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국내 조선업체들은 미증유의 불황에 직면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총리, 시진핑 총리 체제가 들어서자마자 중국 정부는 강도 높은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부좌현 의원 그러면 우리 정부는 무엇 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세계 경기 및 경제상황을 미리 점검해서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서 시장이 공급 과잉이나 과당 경쟁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호황기에 조선사가 난립되다 보니 온 현상으로 지금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중국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문제되는 것이 중소 조선사가 더 급박하기 때문에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구조조정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좌현 의원 철강업도 2009년 이후 건설·조선의 불황과 중국과 인도 등의 과잉 투자에 따른 세계적인 공급 과잉 때문에 한국의 조강 생산량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POSCO의 경우에 당기순이익이 2010년에는 4조 1000억 원이었는데 2013년 상반기에는 5330억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0년부터 계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회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300%에 근접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국제 철강가

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급속하게 하락하다가 2011년에 잠깐 반등하는 듯 했습니다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철강산업 관련 구조조정 방안 및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리, 중국 철강산업의 평균 가동률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자료를……

○부좌현 의원 디테일한 거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못 가지고 있습니다.

○부좌현 의원 6, 70%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어떤 대책 가지고 있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 철강업도 설비는 과잉된 데다가 경기 위축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와 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정책금융이라든지 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계속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좌현 의원 제가 언급한 산업군 외에도 한국 산업 전반이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력산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미 강력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직면한 산업군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만일 구조조정을 미루고 부실을 계속 키워 간다면 향후에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총리,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적절한 지적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필요하면 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좌현 의원 다음에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2012년 10대 재벌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무려 123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2006년에는 재벌의 현금성 자산은 27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총리, 6년 만에 5배 가까이 폭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의원님 질문이 계셔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제가 받은 자료는 코스피 상장 기준으로 하니까 54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

다. 어쨌든 간에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좌현 의원 예, 이것은 재벌이 벌어들인 돈을 노동자와 협력 업체에 분배하지 않았고 국가에 낼 세금도 충분히 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재벌은 여전히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법 파견, 불법 비정규직 고용, 각종 세금 감면 등을 활용한 지극히 낮은 실효세율이라는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해서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총리, 혹시 과세표준 5000억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현재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12년 기준 62개로 알고 있습니다.

○부좌현 의원 예, 그게 전체 기업의 0.0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은 2008년 MB 정부가 실시한 감세정책에 따라서 2011년에만 무려 3조 6000억 원의 세금을 덜 내는 사실상 특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특혜 속에서 극소수의 재벌들은 엄청난 현금성 자산을 쌓아 두고 국민경제는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에 자영업자들과 일반가계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2011년 기준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0만 원인데 자영업자는 그 80% 수준에 불과한 3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가구 수가 145만에 이르고, 그리고 KDI 보고에 따르면 1995년 국내 하위 10% 월평균 실질소득이 75만 7000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67만 1000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주된 이유가 자영업 쇠퇴 때문이라고 합니다.

총리, 이런 현상이 단순히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자 수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자영업자가 많이 증가한 요인도 있겠지만 또 지금 골목상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에서 온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좌현 의원 그렇습니다. SSM, 대형마트, 이런 대형업체들이 골목상권을 침탈하면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됩니다.

총리, 전임 정권 때 재벌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투자도 늘고 고용도 늘어난다는 낙수효과를 대통령과 경제관료들이 입만 열면 말했습니다.

낙수효과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낙수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서는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좌현 의원 전체 기업의 0.01%에 불과한 50여 개 재벌 대기업들은 배를 불리고 자영업자와 일반 가게들은 불황과 빛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런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새 정부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지도록 포용적 성장 전략에 치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좌현 의원 그게 대책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부좌현 의원 이런 심각한 양극화 현상의 대책이 그것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공정한 시장경제와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좌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지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부좌현 의원 박근혜정부 출범 9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심각한 상황에 내몰린 경제와 서민의 살림살이를 대신하기 위해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도무지 잡히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정부는 NLL 사초 폐기 논란과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를 비롯한 국가 공공기관의 대선개입 은폐, 경제민주화 공약과 복지공약 파기,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 찍어내기, 정당해산이라는 반민주적 행위, 언론장악과 통제 등 정쟁거리만 정부가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했었어야 할 일은 먼저 전임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잃어버린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살리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경기 부진과 과잉 투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산업 부문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건실한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부실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펼치면 기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실만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위기는 금융 산업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지난 1997년 IMF 사태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 당국은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들의 강력한 구조조

정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민생 안정입니다. 최소한 공약가계부 지키기, 이명박정부 때 시행된 부자감세 되돌려 놓기, 다주택자를 위한 주택 정책이 아니라 40%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을 반드시 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을 추종하지 말고, 세계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한국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세계 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이명박 정권의 뒤를 잇는 부자감세, 규제완화, 재벌 기업 특혜 주기, 빛내서 부동산 투기 반쳐 주기 등의 정책을 계속 펼친다면 한국 경제는 무너지고 박근혜정부도 함께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 올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부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 의원(281인)

장기윤	장기정	장길부	장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기현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주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정	나성린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노철래, 남도종환, 노류성결, 노류지영, 주성준, 주진영, 주경환, 진규성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주동익, 주민희, 주봉홍, 진원식  
 문희상, 문병두, 문재주, 문현주, 주재성, 주재천, 주미애, 진태경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주명숙, 주선교, 주정애, 진진규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민수, 주영희, 주문종, 주문표, 진영표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효, 주의락, 주익표, 주일표, 진종학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홍지만, 황영철, 황우여, 진주홍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황진하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강기윤,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강대수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서청원, 설훈, 성완종, 손인춘,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김명연,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김성찬, 김세연, 金永柱, 김영환  
 신의진,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김용태, 김재경, 김재윤, 김종훈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김춘진, 김태원, 김학용, 김한표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종범, 김현숙, 김희선, 김희정, 나성린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노철래, 류성결, 류지영, 문희상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박남춘, 박명재, 박민수, 박병석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박상은,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백균기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욱,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성완종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손인춘, 송광호, 신경림, 신계륜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안종범, 안철수, 양승조, 여상규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이운룡, 안동열,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유기준, 유대운, 유승우, 유은혜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李率榮, 이재오, 이종결, 이종진, 윤영석, 윤재욱, 윤후덕, 은수미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일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석현, 이에리사, 이완구, 이용섭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이재오, 이종진, 이현승, 이진복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하나,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전병헌, 전순욱, 전정희, 전하진,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인병헌, 전정희, 전하진,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병헌, 전정희, 정수성, 정우택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성호, 정세균, 정청래, 정호준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조현룡

○개의 시 재석 의원(157인)

강기윤,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강대수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명연,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金永柱, 김영환  
 김용태, 김재경, 김재윤, 김종훈  
 김춘진, 김태원,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결, 류지영,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명재, 박민수, 박병석  
 박상은, 박성효, 박수현, 박완주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성완종  
 손인춘, 송광호, 신경림, 신계륜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종범, 안철수,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승우, 유은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일  
 이석현, 이에리사, 이완구, 이용섭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재오, 이종진, 이현승, 이진복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정문헌, 정수성, 정병헌, 전정희  
 정성호, 정세균, 정청래, 정호준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조현룡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경 환  
 최 규 성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성  
 하 태 경    한 명 숙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홍 의 락    홍 익 표    황 주 홍  
 황 진 하

전 병 현    전 정 희    전 해 철    정 성 호  
 정 의 화    정 호 준    조 명 철    진 선 미  
 진 성 준    최 재 성    추 미 애    함 진 규  
 홍 지 만    황 우 여

○청가 의원(8인)

김 미 희    김 성 곤    김 영 록    김 영 우  
 김 희 국    신 기 남    안 홍 준    유 성 엽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정    진    석  
 입 법 차 장                    임    병    규  
 의 사 국 장                    전    상    수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정    홍    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    오    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문    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동    필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윤    상    직  
 국토교통부장관            서    승    환  
 해양수산부장관            윤    진    숙

○출석 정부위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여    인    홍  
 공정거래위원회장            노    대    래  
 금융위원장                    신    제    윤

【보고사항】

○의안 제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윤관석·박홍근·정세균·배재정·  
 김상희·정진후·배기운·우원식·김태년·  
 유기홍·안민석·박혜자·김춘진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류성걸·유승우·이만우·김무성·  
 이한성·박성호·류지영·주호영·김희국·  
 성완중·강길부 의원 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김우남·윤명희·배기운·김광진·  
 김재윤·김영록·김성태·장하나·최규성·  
 양승조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배기운·김우남·김춘진·김영록·  
 강기정·이종걸·조정식·강창일·최민희·  
 최규성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속개 시 재석 의원(88인)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경 대 수  
 김 경 협    김 광 립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민 기    김 상 훈    김 성 주  
 김 세 연    김 용 태    김 정 록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나 성 린    남 인 순    류 성 걸    문 대 성  
 문 재 인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홍 철  
 박 남 춘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효    박 완 주    박 인 숙    박 지 원  
 박 혜 자    백 재 현    서 기 호    서 영 교  
 손 인 춘    신 경 립    신 동 우    신 의 진  
 심 재 권    심 학 봉    양 승 조    염 동 열  
 우 윤 근    유 인 태    유 일 호    윤 진 식  
 윤 후 덕    이 균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완 구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재 오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춘 석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현 재    인 재 근    전 순 욱    전 정 희  
 정 갑 윤    조 명 철    조 현 룡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경 환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홍    함 진 규    현 영 희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황 진 하

○산회 시 재석 의원(78인)

강 창 일    경 대 수    권 은 희    김 기 준  
 김 민 기    김 상 희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세 연    김 재 윤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한 표    김    현  
 남 경 필    도 중 환    류 지 영    문 정 립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병 석    박 지 원    박 창 식  
 박 홍 근    백 균 기    백 재 현    부 좌 현  
 서 영 교    송 광 호    신 경 립    신 동 우  
 신 장 용    안 효 대    염 동 열    유 승 희  
 유 일 호    윤 관 석    윤 재 욱    윤 후 덕  
 이 노 근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이 재    이 인 영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오    이 중 걸  
 이 종 진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임 수 경

**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최민희 · 이상직 · 송호창 · 윤관석 · 신장용 · 김재윤 · 배기운 · 김현미 · 유성엽 · 정청래 · 이낙연 · 이만우 · 김성곤 · 김기준 · 원혜영 의원 발의)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이낙연 · 황주홍 · 양승조 · 이재영 · 이윤석 · 임내현 · 윤관석 · 김용익 · 배기운 · 최동익 의원 발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이낙연 · 황주홍 · 양승조 · 이재영 · 이윤석 · 임내현 · 윤관석 · 김용익 · 배기운 · 최동익 의원 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이낙연 · 황주홍 · 양승조 · 이재영 · 이윤석 · 임내현 · 윤관석 · 김용익 · 배기운 · 최동익 의원 발의)

이상 8건 11월 2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이낙연 · 황주홍 · 양승조 · 이재영 · 이윤석 · 임내현 · 윤관석 · 김용익 · 배기운 · 최동익 의원 발의)

**11월 2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신지식인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김재원 · 이명수 · 정갑윤 · 손인춘 · 이완영 · 김무성 · 홍문표 · 이한성 · 우원식 · 김기선 · 박대동 · 조경태 · 윤관석 · 주승용 · 문병호 · 이연주 · 우상호 · 임내현 · 이현재 · 인재근 · 유성엽 · 이인영 · 권은희 · 강창일 · 김기준 · 이낙연 · 강동원 · 박지원 · 김영환 · 유승우 · 박범계 · 신장용 · 최민희 · 윤재옥 · 노철래 · 이학영 · 남경필 · 유기홍 · 김재경 · 노영민 · 최재성 · 윤명희 · 강길부 · 신계륜 · 김춘진 · 이철우 · 김태환 · 유일호 · 박홍근 · 강기윤 · 김윤덕 · 정우택 · 서상기 · 오영식 ·

심윤조 · 이에리사 의원 발의)

**11월 2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20 윤관석 · 정진후 · 윤후덕 · 배기운 · 부좌현 · 이원욱 · 신경민 · 정청래 · 이낙연 · 박남춘 · 김춘진 · 전순옥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김민기 · 윤관석 · 박민수 · 박완주 · 박남춘 · 이찬열 · 박기춘 · 진선미 · 김승남 · 인재근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20 이자스민 · 이만우 · 이한성 · 이현재 · 조명철 · 황진하 · 이명수 · 한선교 · 정의화 · 박덕흠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김관영 · 김영환 · 이상직 · 전정희 · 김광진 · 김윤덕 · 한정애 · 조정식 · 주승용 · 이윤석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김영주 · 김태년 · 임수경 · 윤후덕 · 인재근 · 전순옥 · 유은혜 · 최민희 · 김광진 · 박혜자 · 김상희 · 윤호중 · 민병두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심재철 · 유일호 · 김희국 · 안효대 · 원유철 · 강석호 · 박상은 · 김도읍 · 손인춘 · 함진규 · 이이재 · 성완중 · 김기현 · 박인숙 · 전하진 · 안덕수 · 이현재 · 박대동 · 하태경 의원 발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20 김우남 · 윤명희 · 배기운 · 김광진 · 김재윤 · 김영록 · 김성태 · 장하나 · 최규성 · 양승조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장하나 · 이자스민 · 유기준 · 배기운 · 김기식 · 이상직 · 부좌현 · 박원석 · 박수현 · 김현미 · 송호창 · 이만우 · 남인순 · 김우남 · 유성엽 · 김재윤 · 신장용 · 박남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20 김춘진·김영록·배기운·추미애·김우남·김윤덕·이상직·박민수·홍문표·김기선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김우남·윤명희·배기운·김광진·김재운·김영록·김성태·장하나·최규성·양승조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이인영·김현미·정성호·인재근·유승희·이목희·홍의락·조정식·홍종학·진성준·전순옥·김민기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최재천·최원식·남인순·박수현·홍의락·김승남·신장용·김윤덕·김광진·윤호중 의원 발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설훈·정세균·한명숙·장병완·강기정·최재성·이낙연·정성호·김현미·조정식·윤호중·이인영·홍종학·인재근·이원욱·박수현·신장용·박민수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2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김춘진·김영록·배기운·추미애·김우남·김윤덕·이상직·박민수·홍문표·김기선 의원 발의)

11월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박성호·송광호·이장우·이운룡·이완구·정우택·강기윤·황영철·원유철·김기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김태원·정희수·박성호·박인숙·황영철·이한성·이에리사·강기윤·문대성·문정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류성걸·박성호·유승우·유기준·이만우·김무성·이한성·주호영·김희국·성완중·강길부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류성걸·박성호·심재철·이만우·김무성·박인숙·주호영·김희국·성완중·강길부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배기운·최규성·안민석·김우남·김춘진·김영록·이종걸·조정식·강창일·최민희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배기운·최규성·안민석·김우남·김춘진·김영록·이종걸·조정식·강창일·최민희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21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전병헌·강창일·김경협·김성곤·김승남·김재운·박남춘·박수현·박지원·배기운·부좌현·윤호중·은수미·이상직·이해찬·장하나·정성호·정호준·최원식·한명숙·홍영표·이만우·이한성·한정애 의원 발의)

11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김관영·문희상·박민수·전정희·김광진·한정애·조정식·주승용·이윤석·정성호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박민수·우윤근·김동철·변재일·김춘진·김영록·배기운·윤관석·유성엽·정청래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배기운·김우남·김춘진·김영록·강기정·이종걸·조정식·신경민·강창일·최민희·최규성·주승용 의원 발의)

11월 21일 정부위원회에 회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김영주·김태년·임수경·윤후덕·인재근·전순옥·유은혜·최민희·김광진·

박혜자 · 김상희 · 윤호중 · 민병두 의원 발의)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박인숙 · 이만우 · 김세연 · 김태원 ·  
유승민 · 오제세 · 염동열 · 조명철 · 윤명희 ·  
길정우 의원 발의)

11월 21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김상희 · 장하나 · 배기운 · 김현미 ·  
최민희 · 김재운 · 유승희 · 한명숙 · 김현 ·  
김우남 · 이용섭 · 전정희 · 이미경 · 박지원 ·  
김제남 · 문재인 · 남인순 · 은수미 · 조정식 의원  
발의)

11월 25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0 이낙연 · 황주홍 · 양승조 · 이재영 ·  
이윤석 · 임내현 · 윤관석 · 김용익 · 배기운 ·  
최동익 의원 발의)

11월 2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